KDI 북한경제리뷰

KDI Review of the North Korean Economy

2007.3

KDI

KDI 북한경제리뷰
2007년 3월호

발 행 / 2007년 3월 5일
발 행 처 /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팀
발 행 인 / 한국개발연구원장 현정택
편집위원 / 조동호, 고일동, 김상기
김상훈, 김은영

(우) 130-01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7-41

전화: 02-958-4354
fax: 02-967-0186
http://www.kdi.re.kr
e-mail: hmbkim@kdi.re.kr

ⓒ 한국개발연구원 2007

차 례

동향과 분석

2.13 합의 이후 대북경협정책의 방향과 과제 (동용승) / 3

경제자료

2007년 북한의 부문별 경제정책 방향 / 14
북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 / 23
WFP, UNICEF의 2007년 대북지원 프로그램 / 28
6자회담 합의의 내용과 의미 / 38

부문별 주요동향 (2.1~2.28)

1. 대내경제 / 45
2. 농업 및 식량 / 52
3. 대외경제 / 53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57
5. 북한·주변국가 관계 / 59

•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허가 없는 무단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동향과 분석

2·13 합의 이후 대북경협정책의 방향과 과제

동용승(SERI 경제안보팀장)
seridys@seri.org

1. 문제제기

2007년 2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3단계 5차 6자회담에서 북핵 실험 이후 지속된 위기국면이 협상국면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초기조치 문제에 대해 6개국이 합의를 도출해 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남북 간에는 다시 장관급 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는 등 남북한 경제교류를 다시 핵실험 이전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 남북경제협력사업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노무현 정부의 화해협력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88년 「7·7 선언」이후 시작된 남북경협은 약 20년 동안 지속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남북한 교역물량의 확대를 통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연관관계의 확대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통계수치만 보더라도 이를 증명한다. 2006년말 현재 연간 남북교역규모는 13억달러를 상회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대북한 최대 무역상대로서 남한이 부상했다. 또한 대북 직접투자를 통한 협력사업방식을 창출하여 남북간 상호 이해관계를 제고한 면을 주목해야 한다. 개성공단에서는 17개 기업이 활동하면서 1만명 이상의 북한 인력을 고용함으로써 명실상부 남북한이 같이 어우러진 경협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사업도 북핵 문제 등 여러 정치·군사적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남북경협의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비개방지역에서의 다양한 위탁가공사업의 전개 등은 남한의 주문이 없으면 북한 공장들이 가동되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긴밀해진 상태이다.

그러나 사실상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최대의 위기에 봉착했다. 비록 2·13 합의로 인해 분위기는 급반전됐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있는 상태로서 불안정한 환경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여년간의 남북경협을 돌이켜 보면서 금번 북핵 사태를 계기로 향후 대북경협정책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재정비해 볼 필요가 있다.

변화된 환경에서 대북경협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 첫째는 우리의 대북경협은 북한경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는가? 둘째는 지난 20여년의 경협을 통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대체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변화를 촉진해 왔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필자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변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하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대북경협정책의 방향성을 재점검해 보고자 한다.

2. 대북경협은 북한경제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인가?

북한경제 내부는 1990년대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시장화가 급속하게 확산 중에 있다. 특히 1995년부터 3년간 지속된 자연재해는 북한경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경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자력갱생을 통해 유지해 나가기 위해 외부로부터 반드시 들여와야 할 것들을 들여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 대표적인 물자들이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북한에서 생산할 수 없는 원부자재들이었다. 식량과 에너지는 북한경제의 순환구조를 일시에 와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에너지 부족은 각 공장들의 가동을 어렵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식량 문제는 공적분배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장마당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3년 연속 자연재해를 맞이하면서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당국은 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중앙의 공급능력이 약화됐음을 북한주민들에게 시인하고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찾도록 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주민들 입장에서는 생존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나름대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시장화의 확산

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는 이러한 시장화(즉, 북한 당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의 확대 또는 계획경제의 무력화)의 확산을 현실적으로 일부 수용하면서 더 이상의 확산을 막는데 정책적 목표를 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1]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중앙의 공급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시장화의 확산을 제어할 필요성을 항시 느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부의 경제제재 등으로 개별 경제단위의 이른바 독립채산방식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역시 이러한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금번 북핵 실험 및 2·13 합의 이후 북한당국은 중앙의 공급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시장화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하에서 정부 대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 및 직접적 경협방식은 북한당국의 공급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북한내부의 시장화를 억제하는 역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대북경협은 민간차원의 경우에도 민경련, 민화협 등 단일화된 창구에서 관리됨으로써 중앙의 공급능력을 높임과 동시에 시장화 확산이라는 문제에는 접근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여기에서 중국의 대북경협 방식과 남북한 경협의 차별성 문제를 거론해 본다. 중국과 북한의 교류는 이른바 기업 대 기업(B to B)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바, 이는 북한내부의 시장화 확산이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중국과 북한의 정부 대 정부(G to G) 사업은 일부에 국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관계유지를 위한 중국의 지원이라는 성격으로 진행됨과 동시에 보이지 않는 중국 정부의 대북 압박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예를 들면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에 위치한 중국 랴오닝성의 단둥시는 신의주를 통해 북한의 물자공급 배후시장으로서 경제가 활기를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북한의 경제교류의 70% 이상을 담당하면서 북한 내에서 시장화에 따른 부의 창출효과를 대부분 흡수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남북경협은 사회문화교류를 포함하여 표면적으로는 B to B 방식이지만 민경련, 민화협 등 북한의 대남전담조직으로 창구가 일원화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B to G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민간차원의 경협까지도 중앙의 공급능력을 제고하고 시장화의 확산을 제어하는 수단으로 남북경협을 적극 활용하

1) 이 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이 존재할 수 있다.

는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민간차원의 남북경협도 선별적으로 수용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북한 공장 및 기업소들이 외부세계와 협력을 원하는 분야가 원활하게 경제협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호 체제가 기본적으로 시장원리에 입각한 교류가 일어남으로써 호혜적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협의 확대를 통한 경제 파이의 확장과 그에 따른 한반도 경제의 번영을 구가한다는 궁극적 목표에도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기존 북한의 특구정책에 따른 경협 방식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역시 북한의 창구 일원화의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다. 개성공단은 이미 북한인력을 1만명 이상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공단의 확대에 따라 10여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는 북한인력들이 시장경제를 경험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향후 북한경제의 주요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측면이 있다. 금강산 관광은 남한 사람들이 북한을 제한적이나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 남북한의 동질성 회복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할 수 있는 일종의 국민적 교육현장으로써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이 많다. 반면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대북직접투자 및 무역거래의 집중화를 통해 남한자본의 북한진출을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대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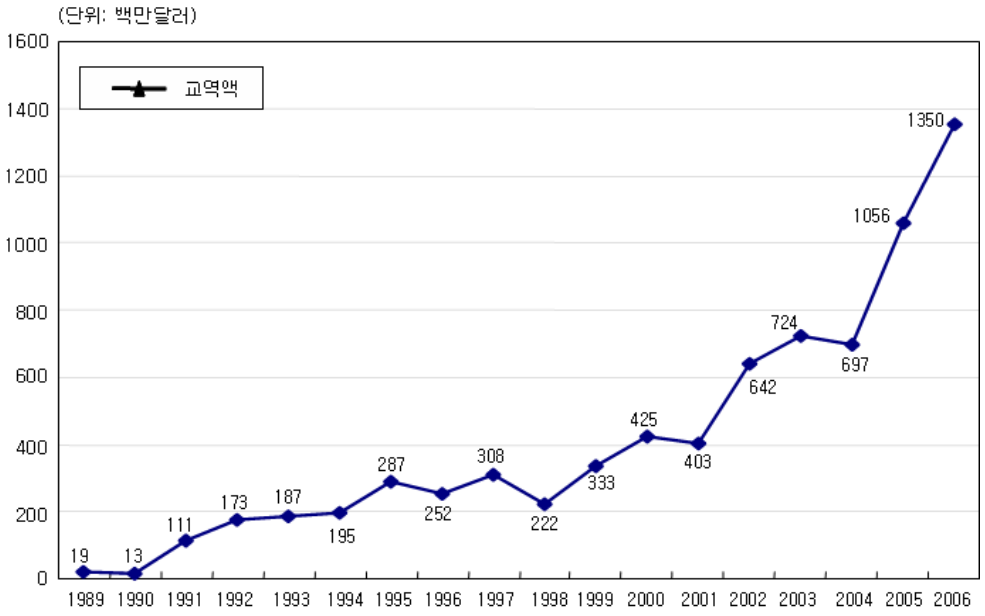
우리가 지향하는 남북교류협력의 목표는 남북간 접촉면의 확대를 통해 북한이 변화를 택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나아가 북한경제의 수준을 남한의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향후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88년 '7·7선언'에서 남북교류를 전면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20년 가까이 남북간 교류협력은 지속되어 왔다. 남북간 교류는 물적교류와 인적교류 측면에서 당시와 비교하여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물적교류를 대변하는 것은 남북교역 추이이다.[2]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남북간 반출입이 표시되는 남북교역에는 기업차원에서 추진되는 상업적 거래, 즉 단순교역, 위탁가공교역 및 경제협력사업 등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지원과 같은 비상업적 거

남북교역은 매년 크게 신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부터는 정부차원에서 진행해 온 3대 경협사업, 즉 개성공단, 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이 본격화되면서 반출입 합계가 연간 10억달러를 넘어서기 시작했으며, 북핵실험으로 주춤했던 2006년에도 13억 4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핵실험으로 인해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감소하면서 물적교류의 양적인 측면에 다소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2·13 합의' 이후 대북지원이 재개되고 개성공단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 경협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남북교역 추이



자료: 무역협회

한편 인적교류의 측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89년 이후 2006년 6월말 현재까지 약 22만명이 북한을 방문했으며, 반면 6천명 정도의 북한주민이 남한을 방문했다. 특히 금강산 관광을 통해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2006년 6월말 현재 약 128만명에 이르고 있다. 남북 당국간 회담도 2005년에는 각 분야에서 34회에 걸

래도 포함된다.

쳐 개최됐다. 이는 월평균 3회 정도가 개최된 것이다. 개성공단의 경우에도 2006년 11월말 현재 약 1만명의 북측 근로자가 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3월까지 13차례의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서도 약 1만3천명 정도가 만남을 가졌다. 이러한 수치만 본다면 남북간에는 이해의 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표 1〉 연도별 인적교류현황

(단위: 명)

	89~97	'98	'99	'00	'01	'02	'03	'04	'05	'06.1~6	누계
북한 방문	2,405	3,317	5,599	7,280	8,551	12,825	15,280	26,213	87,028	51,773	220,271
남한 방문	575	0	62	706	191	1,052	1,023	321	1,313	795	6,038
합 계	2,980	3,317	5,661	7,986	8,742	13,877	16,303	26,534	88,341	52,568	226,309

자료: 통일부

〈표 2〉 금강산 관광객 추이

(단위: 명)

	'98	'99	'00	'01	'02	'03	'04	'05	'06.1-6	누계
인 원	10,554	148,074	213,009	57,879	84,727	74,334	268,420	298,247	129,016	1,284,260

자료: 통일부

이와 같은 통계적 성과 또는 남북간 인적·물적 거래 자체의 규모를 수치를 놓고 본다면 남북간 교류협력은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류협력의 목표인 남북간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우선 일인당 GNI, 수출입 규모 등 몇 가지 남북간 비교 통계를 검토해 본다. 우선 일인당 GNI는 1990년 남한이 북한에 비해 5.4배였으나, 2004년 현재 15.5배로 확대됐다. 무역규모는 1990년 32.3배에서 2004년 167.2배로 크게 확대됐다.[3] 현재 북한의 통계수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근연도까지 비교하기는 어

렵지만, 한국경제의 성장정도를 감안할 때 격차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판단된다.[4] 이러한 수치상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은 남북간 교류협력이 지난 20여년 가까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순기능적 목표, 즉 남북간 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의 실질적 성과는 다소의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비동시화 효과(de-synchronization effect)[5]로 설명할 수 있다. 남한경제는 선진경제로의 진입을 앞두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더해 갈수록 탄력이 붙고 있는 반면, 북한경제는 더딘 속도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개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왔다. 남북교류협력이 남북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이라면 북측의 적극적 노력에 의해 남한보다도 빠른 속도로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측의 변화속도가 남측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남한의 대북교류협력정책이 시간 개념과 남한경제의 기본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정책의 성과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남북간 격차는 속도의 충돌(the clash of speeds)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격차는 더욱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인적교류의 측면에서도 유사한 분석이 가능하다. 인적교류를 통해 남북간의 이해도를 더욱 높이는 것이 교류협력의 목표라고 할 때, 금번 북핵 실험 이후 북한이 보이고 있는 대남태도는 인적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도의 제고와는 무관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정책제언

상기에 제기한 두 가지 질문은 다양한 견해와 상징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남북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여 한반도 경제의 파이를 확장하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화를 확대하고 북한당국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북한경제의 발

3) 통계청,『남북한 경제사회상 비교』, 2005.

4) 남한은 2006년 수출총액이 3천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2004년 당시 수출입 합계가 4,783억달러였던 점을 감안하면 남한경제의 성장정도에 비해 북한경제의 성장정도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엘빈 토플러, 하이디 토플러, 『부의 미래』, 김중웅 역, 청림출판, 2006, 59~102쪽 참조

전속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북경협정책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북한과의 경협을 추진하는 이유가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고 북한경제의 국제사회 진입을 통해 북한의 경제상황을 호전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남한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일조를 한다는 등의 기본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이러한 기본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기본원칙을 북한에 대해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북한적 특수상황을 감안하는 것과 무관하게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보편적 가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혼동을 극복해야 한다. 북한은 정보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는 북한의 특수성이 발전 속도의 시간적 차이를 줄이지는 못한다.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수록 남북간의 격차는 더욱 커지게 되며 북한의 수용능력은 점차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북한의 통계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추정해서 발표한다는 점 또한 모순된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 북한통계를 추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북한이 통계를 발표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북한은 특수성 때문에 통계를 발표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정한 통계수치는 북한경제 및 사회상의 왜곡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효과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대북지원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식량차관, 비료 무상지원 및 경공업 원자재 유상 지원 등의 형태가 구상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차원에서 G to G 사업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대북지원을 B to B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대북식량차관이 제공될 경우 일정 정도의 경협환경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행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측에서 민경련 등으로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북측의 경협 창구 다원화, 중국과 유사한 수준의 경협진입장벽 철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대북식량차관 제공은 무상지원이 아닌 식량차관의 형태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은 PDS(공적 분배 시스템)를 통

해 배급을 하면서 일정금액을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바, 이는 북한당국의 재정수입을 올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북한의 재정수입 확대분에 대해서 북한당국이 남한기업의 경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상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협의 기준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대북경협은 북한의 현실을 기준점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북의 변화 및 발전 속도를 외부와 적어도 동일하거나 더욱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변화요구 수준을 좀더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경협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진행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의 스탠더드에 맞춰 교류협력을 진행할 경우 시간적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우리측이 이에 맞는 요구를 북한에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한 분야가 대부분이다. 표현자체를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다소 추상적일 수 있지만, 예를 든다면 대금결제방식에서 은행간 거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국제적인 은행간 거래를 위해 갖춰야할 자격요건들이 있게 된다. 즉 북한이 제도적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경우 은행간 거래는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다른 예로는 북한방문 절차에 대해 상호간 비자협정 등을 체결하자는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상용비자의 경우 당국간 협의에 의해 일정기간 자동승인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자고 요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역시 북한은 변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수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넷째, 남북간 교류협력의 성과를 통계수치 및 남북관계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조망함으로써 발생하는 착시현상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는 북한의 발전속도와 남한의 발전속도에서 발생하는 차이, 북한의 경제규모와 남한의 경제규모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격차, 그리고 북한의 개방정도와 남한의 개방정도에서 발생하는 차이 등을 감안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수시로 남북간 격차가 얼마나 해소됐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차원의 대북사업 또는 지원의 경우도 남북한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북한이 적극성을 보일 경우 일종의 반대급부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막연히 북한이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지원하는데서 탈피하여 분명한 결과에 상응

하는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우리의 교류협력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한 대응논리로서 북한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미시적 접근이 아니라 남북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북한은 어떤 노력을 했고, 우리는 북한에 어떤 요구를 했으며 그 결과 남북간 격차는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까지의 교류협력은 주로 남한이 북한에 주는 일방향적인 방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살펴보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북한의 필요성은 물론이고 우리의 필요성도 절실히 요구된다. 예를 들면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확대될 경우 북한시장은 일종의 내수시장적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남한의 4천9백만 인구와 북한의 2천만 인구가 결합될 경우 약 7천만의 내수시장이 형성된다. 한국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시장이 열릴 경우 엄청난 건설수요가 예상된다. 노동력의 이용이 보다 효율적이 될 수 있다. 고급인력이 필요한 북한시장에서는 남한의 유휴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으며, 대량의 노동력이 필요한 남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신하여 북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남북간에 긴장이 완화될 경우 남북한 청년 노동력들은 군복무에 따른 2~3년의 시간을 산업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다시 말해 청년노동력들의 상상과 미래비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다. 활동영역의 변화에 따른 기회도 중요하다. 섬 아닌 섬으로 살아온 남한은 남북한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면 활동영역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다. 반드시 선박이나 비행기로 가야할 곳을 자신이 직접 자동차를 몰고 갈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사고의 영역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해서 북한의 변화를 강제적으로라도 견인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여섯째, 남북교류협력의 범위를 동북아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10년 후를 예상해 보자. 한반도 내부의 변화와 함께 일종의 글로벌 매가트랜드는 어떤 형태로 전개되면서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동북아 지역의 한국, 일본, 중국은 다양한 형태로 상호 이해관계에 상응하는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핵심적인 사항은 FTA가 될 수 있다. 현재 한미간에 논의되고 있는 한미 FTA는 한중, 한일 FTA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경쟁관계에서도 촉발될 수 있다. 동북아 역내교역비중은 EU의 역내교역비중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향후 동북아 지역은 가장 결속력을 가진 경제블록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물론 정치적·역사적 문제로 인해 쉽게 블록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향후 10년을 내다볼 때,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반도 통일문제는 바로 동북아 역내 블록화의 추진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북핵 문제로 인해 북한의 변화가 추동될 경우 북한은 동북아 역내국가들의 협력의 장으로 부각될 수 있다. 북한의 핵포기 대가로 국제사회는 대북지원을 추진할 것이며, 이는 다자간 협력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대북지원의 핵심적 역할을 할 국가들은 역시 한국, 중국,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5.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분석했던 기존의 내용들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글은 구체적으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해야 하며, 민간기업의 교류는 어떻게 개선해야 하며,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지속해야 하는가 등등의 분석이 아니다. 이 글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의 기본을 살펴보는 데 있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점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는가를 재점검해 본 것이다.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위기라 함은 기존의 남북한 교류협력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반면 기회라 함은 그동안 잊혀져 왔던 기본을 다시 돌아볼 수 있음과 동시에 지향점을 재점검함으로써 발전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밝혔듯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의 방식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세계에서 기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이라는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에서 외부세계에서 북한변화를 적극 견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남한이 서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진정한 변화를 택할 경우 교류협력은 더욱 큰 범위로 확대될 수 있으며, 남북간 격차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북한경제의 시장화 및 발전 속도가 높아짐으로써 미래지향적 남북관계, 통일을 지향하는 한반도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제자료

2007년 북한의 부문별 경제정책 방향

본 자료는 북한의 내각 및 각 성 등에서 2007년 부문별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올 초(주로 1월) 북한의 「노동신문」, 「민주조선」, 그리고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에 기고했거나 인터뷰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매년 신년공동사설이 발표되면 중요 경제부문에 대해서는 해당 부문의 책임자가 당해 연도의 정책방향 내용을 기고형식이나 인터뷰 형식으로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신문에 게재되는 이러한 기사내용은 매우 짧고, 신년공동사설에서 제시된 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복해서 설명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세한 정책내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일부 부문에서는 구체적인 사업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략적인 정책내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여기서 열거한 부문은 내각, 농업, 경공업, 전력공업, 석탄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 과학, 국토환경보호, 무역 등이다.

1. 내 각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도관리하는 경제사령부이며 경제사업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경제지도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임.
- 올해에 내각의 역할을 높이고 경제관리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 오겠음.
-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적 공간을 활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며 노동행정사업을 짜고들어 나라의 노력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 모든 경제일군들이 새로운 종자를 찾아 쥐고 초행길을 걷는 선구자, 나라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을 스스로 찾아 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도록 함.
- 특히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걸려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을 올바로 설계하고 결단성 있게 조직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추진
- 경제사업을 깊은 연구와 구체적인 타산 밑에 전망성 있게 설계하고 힘 있게 전개해 나가겠음.

(내각부총리 곽범기, 「민주조선」, 2007. 1. 2)

<경제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 당의 경제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아래 단위들에 대한 장악과 지도통제를 강화하여 경제사업을 주동적으로 작전하고 경제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 들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
-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에만 매달려 일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을 깊은 연구와 구체적인 타산 밑에 전망성 있게 설계하고 힘 있게 전개해 나감.
- 특히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걸리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풀기 위한 사업을 올바로 설계하고 결단성 있게 조직하며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추진
- 내각위원회, 성들과 각 도인민위원회들에서 당의 노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게 경제관리를 짜고 들도록 함.
- 인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고 경제적 공간을 옳게 활용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 경제사업에서 결정적 전환을 가져 오도록 함.
-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노동행정사업을 짜고 들어 나라의 노력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며 누구나 다 맡은 초소에서 조국의 번영을 위해 뛰고 또 뛰도록 함.
- 시대의 요구에 맞게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을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처리해 나가는 정연한 체계와 질서를 세워나감.
-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물과 건설물의 질을 높이며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해 나가도록 장악과 지도통제를 강화

(내각사무국 국장 김영호, 「민주조선」, 2007. 1. 17)

2. 농 업

<당의 농업혁명방침 관철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 당의 종자혁명방침, 감자농사혁명방침, 두벌농사방침, 콩농사방침 관철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농사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하여 올해 농사를 잘 짓겠음.
- 앞선 농업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사일의 기계화비중을 더욱 높임.
-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지대적 특성에 맞게 작물과 품종을 배치하고 모든 영농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더욱 강화
- 올해에 분조관리제의 생활력을 높이 발휘시켜 농장원의 생산의욕을 더욱 높이며 그들이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음.
- 농장들에서 자체로 농사짓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도록 하며 더 많은 거름을 생산하여 논밭의 지력을 높이고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철저히 강구
- 미루벌 물길공사를 적극 다그쳐 나감.

(농업상 리경식, 「노동신문」, 2007. 1. 2)

<2007년 농업생산: 상승궤도를 계속 달린다. 올해도 증산을 위한 총동원, 총집중>

- 2006년에 겹친 큰물과 자연재해는 농업부문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줌.
-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적대국들의 경제제재로 인하여 농업의 현대화를 위한 일련의 계획들에 지장을 초래
- 2006년 알곡생산성도 성과가 많았던 2005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총화
- 재작년 이래 온 나라가 농업을 돕는 기풍이 확고하게 확립
  ·씨뿌리기, 모내기, 가을걷이의 시기에는 수많은 인민들이 농장을 찾아가 노력지원
  ·나라에서는 농장에 필요한 기계와 설비, 전력과 연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하는 대책을 세움.
- '종자혁명'의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후와 풍토에 알맞은 알곡종자가 연구, 개발되고 그 성과가 현장에 도입
  ·종자의 개량으로 벼와 강냉이는 정보당 수확을 늘일 수 있는 전망이 열림.

·일대 잡종생산체계를 강냉이 생산에 도입함으로써 정보당 생산량을 1.5배부터 2배의 수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는 전망을 펼침. 이 체계를 벼 생산에도 적용할 계획

- 콩 농사에서는 증산과 더불어 농사의 과정에 땅의 지력을 높이는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심화
- 토양의 영양가를 높이기 위한 투자도 진행

(농업성 농산국 김경일 책임부원, 「조선신보」, 2007. 1. 15)

3. 경공업

<인민소비품생산을 더욱 늘여>

-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량을 대폭 증대
- 경공업성의 모든 관리국들에서는 경제작전과 생산지도를 짜고들어 공장, 기업소 일군들이 과학적인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세우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도록 함.
- 모든 시, 군들에서 기초식품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적극 실현하여 어디서나 질좋은 간장, 된장을 비롯한 기초식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함.
- 방직공업과 신발공업, 식료공업과 비단공업을 비롯한 모든 부문들에서 기술개건사업을 착실히 하여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
- 현대적인 직기생산을 늘여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하고 신발의 질적 구성을 개선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기여
- 올해에도 평안북도안의 경공업공장들을 비롯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이 새겨진 단위들이 생산활성화와 제품의 질 제고를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설 것을 독려

(경공업상 리주오, 「노동신문」, 2007. 1. 3)

4. 전력공업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을 굳건히>

-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은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
- 무엇보다도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
- 각지 화력발전소들과 수력발전소들의 현존능력을 더 높이는데 큰 힘을 넣은 한편 이미 성과적으로 보수된 발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보장에 총력을 집중
- 우선 화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경주
  ·특히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와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사업에 주력
  ·각지 화력발전소들에서 발전설비들에 대한 관리운영을 잘 하고 연소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법들을 적극 도입
  ·발전소들의 설비대보수를 힘 있게 다그칠 수 있는 준비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계획된 대보수를 빠른 기일 안에 질적으로 끝냄으로써 발전설비의 운영대수를 크게 늘임.
- 수력발전소들에서 수력구조 물보수와 물관리를 잘하고 운영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며 수차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전개
- 효율 높은 수차제작에 큰 힘을 넣어 수력발전소들의 전력생산을 한 단계 높임.
- 송전계통을 정비하여 전기도중손실을 극력 없애고 합리적인 전력분배를 실시하여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 있게 이용하기 위한 강한 대책을 세워 나감.

(전력공업상 박남칠, 「노동신문」, 2007. 1. 2, 「민주조선」, 2007. 1. 5)

5. 석탄공업

<석탄생산에서 더 높은 성과로>

-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탄광들에서 굴진역량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의 역할을 높여 예비채탄장을 넉넉히 마련
- 굴진작업에 새 기술을 받아들이고 장비들을 현대적으로 갖추기 위한 사업도 전망성 있게 작전하며 대담하게 추진

- 굴진용 자재와 설비들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하는 혁명적인 규율을 세우고 이미 꾸려진 자력갱생기지들을 보강, 완비하여 그것이 은을 낼 수 있도록 함.
- 특히 채굴조건이 좋고 매장량이 풍부한 서부지구탄광들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석탄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늘임.
- 각지의 탄광들에서 생산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과 지도를 잘해 나감.

(석탄공업상 김형식, 「민주조선」, 2007. 1. 4)

6. 금속공업

<새로운 비약과 혁신을>

- 우선 생산정상화를 위한 조직사업과 지휘를 전투적으로 진행
  ·여러 광산들의 생산조건을 개선하면서 선진적인 생산방법을 현실에 널리 도입하는 사업을 전개
  ·그리고 많은 물동을 요구하는 금속공업부문의 특성에 맞게 운광능력을 높여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원료, 연료를 제때에 실어 나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음.
- 제철, 제강소에 있는 주체적인 철 생산기지들을 더욱 보강, 완비하여 생산능력을 훨씬 높일 것을 계획
- 철 생산용 중요자재를 생산, 공급하기 위한 면밀한 작전과 지휘를 펴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의 연료에 의한 합금철생산공정을 꾸리고 그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려고 함.
- 기술개선사업과 관련 무엇보다도 광석품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나갈 계획
- 광산의 선광장들의 기술개건을 적극 다그쳐 품위 있는 광석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토대를 튼튼히 갖추려고 함.
- 제철소들과 제강소들에서 용광로와 소결로, 전기로들의 기술개건을 다그치며 이빠진 공정들을 완비하며 새로운 공정들을 더 꾸밈으로써 생산성을 종전에 비해 훨씬 높일 것을 계획(지금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

(금속공업성 부상 양 호, 국장 명송철, 「민주조선」, 2007. 1. 11)

7. 철도운수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 유리한 조건을 자체로 마련하면서 정황에 맞게 수송조직과 지휘를 기동적으로 진행
- 특히 인민생활 향상에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농업전선과 경공업공장들 그리고 인민경제 선행부문들에 보낼 물동수송에 선차적인 힘을 넣음.
- 철도성으로부터 역, 대, 소들에 이르기까지 유일사령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지켜 나감.
- 철도운수부문의 모든 단위들에서 당이 지펴준 '5.18무사고정시견인초과운동'을 더 활발히 벌려 사회주의건설장들에 짐을 더 많이, 더 빨리 실어나르도록 함.

(철도성 수송지휘국 국장 최광일, 「노동신문」, 2007. 1. 4)

<철도수송에서 새로운 혁신을>

-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고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
  - ·올해에 농업부문에 필요한 영농물자와 자재를 우선적으로 수송하는 한편 각지 경공업공장들에 필요한 물동들을 제때에 어김없이 수송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음.
  - ·한편 전력과 석탄, 금속공업부문에 필요한 물자들을 원만히 수송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면밀히 세울 계획
  - ·이를 위해 통일적인 유일사령지휘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열차운행을 합리적으로 조직
- 기관차의 실동율을 높이며 앞선 운전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힘 있게 전개
- 이미 마련해 놓은 수리기지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기관차와 화차수리를 적극 다그침.
- 철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계속 힘을 넣어 철도수송을 원만히 보장

(철도성 참모장 전길수, 「민주조선」, 2007. 1. 5)

8. 과 학

<당의 과학기술중시노선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겠다>

- 짧은 기간에 정보기술과 나노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을 일으킴.
-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인민경제를 개건하기 위한 투쟁의 된바람을 일으켜 나감.
-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운동을 적극 벌려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적극 달려나가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우리의 지혜, 우리의 기술로 풀어나가겠음.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도록 하는데서도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앞장서도록 하겠음.

(국가과학원 원장 변영립, 「민주조선」, 2007. 1. 4)

9. 국토환경보호

<조국강산을 사회주의 선경으로>

- 평양시를 비롯한 전국의 산들에 지난 해보다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더 많이 심을 것을 계획
- 이를 위해 평양시와 전국의 여러 시, 군들에 꾸려 놓은 양묘장들과 숲사이 양묘장들에서 산림경영소 일군들과 관리공들이 품들여 키워놓은 나무모들에 대한 보관과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 산림조성에서 적지적수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며 해당 지역의 지대별, 필지별 특성과 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에 맞게 나무모배치를 정확히 하도록 함.
- 산림조성에서 넓은 잎나무와 바늘잎나무를 적절히 배합하여 심은 나무들이 병충해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도 전망성 있게 세우고 있음.
- 봄철과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나무심기를 군중적으로 힘 있게 내밀기 위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도 바로 세우고 있음.
- 대동강을 비롯한 여러 강들에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되는 호안공사들을 장마철 전으로 끝내기 위한 계획작성작업을 한데 이어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음.
- 시, 군들에서 강하천들의 강바닥파기와 물줄기바로잡기 등 중소하천정리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도록 하는 사업도 면밀히 추진

- 내각과 관련 성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진행중에 있는 중요도로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한 경제조직사업도 적극 추진
- 해당지역의 국토환경보호관리기관들의 책임성을 높여 시, 군들에서 도로기술개건을 위한 정리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 도로의 견고성과 문화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들도 강구

(국토환경보호성 장준갑, 김병철, 김성학 국장, 「민주조선」, 2007. 1. 20)

10. 무 역

<새로운 상황에 맞게 무역을 다각화>

- 올해에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를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려 나갈 구상
- 올해에 다른 나라 상업회의소들과의 협력교류의 폭을 넓히며 대외무역촉진의 계기를 주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
  · 특히 유럽과 러시아 원동지역, 동남아시아 나라들과의 무역확대에 역점
- 지난 해에 10여개의 국내의 무역회사들과 수출관계기업소들을 새로 회원으로 받아들였고 140여개의 회사들에 대한 법인확인과 대외인증사업을 진행
- 올해 3월 이탈리아 삐에몬떼주 상공회의소와 조선상업회의소의 공동주최로 기업토론회가 열릴 예정
- 러시아 원동지역의 기업인들과의 교류와 협조가 올해 상반기안에 계획
-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나라들에서도 무역투자설명회 조직과 교류에 대한 제안이 들어옴.

(조선상업회의소 리성운 부소장, 「조선신보」, 2007. 2. 12)

경제자료

북한 정보기술의 발전과 이용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연구원 리금화(李錦華)

본 자료는 일본 環日本海經濟硏究所에서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ERINA REPORT 2007년 3월호에서 "朝鮮における情報技術の發展とその利用" 제하의 논문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이 논문은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면서, 최근 정보기술 분야를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여 경제와 인민생활 전반에서 정보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북한의 정보기술은 농업, 경공업, 중공업, 기상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관리에도 응용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시스템은 자료 및 뉴스를 제공하고 전자상거래를 가능하게 하며 음악감상, 채팅 등 문화생활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원격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저변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이 논문은 조선컴퓨터센터와 김책공업대학 전자도서관의 사례를 들어 정보기술의 활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

원문은 http://www.erina.or.jp/Jp/Jf/appear-f.htm에서 볼 수 있다.

최신 과학기술에 근거해 인민경제의 기술 개건과 생산 정상화를 보장해 강성대국 건설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북한 당국의 일관된 방침이며 확고한 의지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보기술 분야를 강조하고 있다.

1. 정보기술의 발전

21세기는 정보산업 시대이다. 북한 당국은 정보산업의 발전 방향과 추세를 파악하고 정보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 연구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 사업을 위해 국가적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정보기술 부문의 과학 연구기지를 우선적으로 확충해 필요한 자재와 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 예가 조선컴퓨터센터(KCC) 건립이다.

조선컴퓨터센터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바둑 프로그램이나 지문검색시스템 프로그램을 비롯한 많은 프로그램을 국제대회나 국제전시회에 출품하였다.

또한 북한 당국은 정보기술 발전에서 인재양성이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컴퓨터 수재교육 체계를 운영해 10~20대 컴퓨터 수재를 키워내고 있다. 금성제1중학교, 금성학원,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을 컴퓨터 수재 양성 기지로 설정해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컴퓨터 수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 학교에는 최신형 정보 설비를 설치하고 생활 전반에 걸쳐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든 학교에도 컴퓨터 교육을 확대하여 정보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에 맞게 정보기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맞추도록 하였다.

정보기술 부문의 전문대학과 여러 대학의 정보기술 전문학과에서도 이 분야의 발전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에 최신식 전자도서관이 건설되었다.

북한에서는 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주체적 입장에서 수행하고 있고 선진 과학기술을 나라의 실정에 맞춰 받아들이고 있다. 컴퓨터 분야에서는 북한식 프로그램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민경제의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생산 및 경영관리, 조종 프로그램 등 각종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그램과 응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 정보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산업, 정보통신산업, 데이터베이스산업 등 정보산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는 정보기술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해 그들의 사

업조건, 생활조건을 보장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있다.

2. 정보기술의 이용

북한의 정보기술 산업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북한에서는 단기간에 기술개건, 생산·경제관리, 사회생활에서 컴퓨터화가 급속히 추진되었다. 첫 인공위성 광명성 1호의 성공적인 발사가 이를 보여준다. 적은 비용으로 단시간에 인민경제나 사회생활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북한 정보산업 발전의 원칙적인 입장이다.

북한에서는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경제 전반에서 정보기술 수단을 대대적으로 도입하고 제품의 설계, 생산, 판매, 재정 관리 등 전반적인 과정에서 자동화, 현대화를 완수하였다.

금속, 석탄, 철도 운수, 기계 제작 등 기간산업 부문에서 정보기술에 근거한 생산·경영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방직공업과 피혁공업, 견직공업 등 경공업 부문에서는 현대화되고 정보화된 생산기지가 신설되었고 기존 설비에 최신정보 기술을 도입하도록 하였다.

농업 부문에서는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농작물의 품종 개량을 과학적으로 실시하고 각종 농작물에 가장 적합한 토지와 지역을 선택하여 영농 공정과 시비량도 최적량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노동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되었다. 또 농업 노동자를 위한 농업 정보기술 강습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각지에 건설된 현대적인 메기 양어장, 양계장, 소목장, 타조 목장, 집오리 목장은 최첨단 정보과학 기술이 도입된 정보산업 시대의 표본으로서 식생활 향상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

또한 많은 공작기계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컴퓨터화를 실현해 기계설비를 가공하는 실험 생산도 진행 중이다.

기상정보 분야에서는 기상정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컴퓨터를 이용해 기상정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상자료 종합제공시스템”과 “조선 기후 자료집”을 만들어 냈다. 일기예보와 같은 과학적 기상정보에 근거해 생산활동과 경영활동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악천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예방해 수익성을 높일 수 있다.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 생산지휘시스템이 고도로 자동화·현대화되었다. 나라의 모든 생산단위와 경제지도 단위를 네트워크로 연결해 행정적 지시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제품생산과 공급에 연관이 있는 공장,

기업소가 하나의 생산단위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획 작성과 자재공급, 노력관리와 설비관리 등 경영관리를 과학화하여 최소한의 노력과 기계 설비, 원료, 자재, 자금에서 최대한 실리를 얻고 있다. 공장, 기업소의 기술적 개선 속도와 제품의 갱신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가 통신과 결합되어 컴퓨터 네트워크가 활발해져 계산 중심의 업무처리방식에서 컴퓨터를 사용한 업무처리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젊은이뿐만 아니라 노년층, 중년층이라도 언제, 어디에서나 컴퓨터 네트워크에 가입하여 가상세계를 통해 각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컴퓨터 네트워크 가입자들은 자료, 뉴스, 전자상거래, 문화생활, 이메일, 채팅, 원격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료의 제공: 컴퓨터 네트워크의 구축으로 거리와 시간차가 감소되어 장소를 불문하고 자료의 조사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공되는 자료는 도서자료, 기술 자료, 신문자료 등이다. 도서자료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부문의 자료가 제공된다. 기술자료는 정보기술, 생명과학기술, 나노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과학기술 자료이다. 신문자료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들이 있다.

△ 뉴스의 제공: 거의 모든 홈페이지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모든 분야의 뉴스를 일별, 시간별로 싣는다.

△ 전자상거래: 친절하고 치밀한 서비스, 신상품 안내, 신용거래, 상품 검색이나 구매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하여 네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

△ 음악 감상, 전자 메일, 전자 게시판, 실시간 대화(채팅): 전자메일, 전자 게시판, 실시간 대화 등은 편리할 뿐만 아니라 시간낭비를 줄여 사회생활과 문화생활에 일대 전환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원격교육 실시: 각 종 외국어의 원격 강의와 정보기술, 생명과학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을 포함한 많은 부문의 과학기술에 관한 원격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최고전당인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최신정보기술 수단을 충분히 구비한 전자도서관이 설치되었다. 이 전자도서관은 대학 내의 강좌, 연구실 등 모든 부서는 물론 국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기관, 기업소, 과학 교육기관과 가정에서도 사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접속할 수 있고, 24시간 사용할 수 있다. 현대적인 검색시스템으로 모든 도서뿐만 아니라 수 백대의 컴퓨터로 각종 전자 도서와 자료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운영 시스템이 완전하게 컴퓨터화되어 각종 학술토론회, 과학 심의, 국제 교류, 도서전시회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새로운 기능의 하나로 원격교육시스템을 들 수 있다. 이 도서관에 설치된 근대적인 원격교육시스템은 국내 어디에서라도 시간에 관계없이 대학의 유능한 교수, 박사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의 청취뿐만 아니라 질의응답도 실시간 가능하게 되어 시험도 실시할 수 있고, 강의 내용과 관련된 참고서도 볼 수 있다. 원격교육시스템으로 유능한 교원의 강의 수강이 가능하게 되어 대학교육은 물론 통신교육, 야간교육 등 각종 교육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경제자료

WFP, UNICEF의 2007년 대북지원 프로그램

본 자료는 세계식량계획(Word Food Programme)과 유엔아동기금(United Nations Children's Fund)의 2007년도 대북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북한 주민들의 영양상태가 호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WHO의 권장기준에 못 미치고 있다고 전하면서 2007년도 대북지원의 목표를 여성과 아동 등 북한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고 밝혔다. 유엔아동기금(UNICEF)은 최근 북한의 보건 및 영양, 식수 및 환경 보건위생, 아동들의 교육문제의 실태를 밝히고 이들 문제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2007년도에 전개해 나가기로 하였다.

북핵 문제로 인한 대북제재 등으로 지원여부에 대한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제기구들은 대북지원의 규모를 점차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고, 긴급구호의 측면보다는 장기적인 구호 및 복구활동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자료원>

- WFP: "Projected 2007 Needs for WFP Project and Operations KOREA, DPR"
- UNCEF: "UNICEF HUMANITARIAN ACTION REPORT 2007

<WFP>

1. 대북지원 목적

북한은 어려운 농업 환경에 따른 식량부족, 경제쇠퇴, 환경문제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여전히 힘든 상태이다. 1990년대 기근 이후 총체적인 식량위기는 나아지고 있지만 2,300만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전히 외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불과 18% 수준의 경작지와 비료, 우량종자, 연료 및 에너지 등의 제한된 투입 등으로 인해 북한의 농업 생산은 매우 어려운 상태이다. 상업적인 수입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북한이 매년 필요로 하는 최소 요구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로 공업활동 지역이 아닌 도시의 주민들과 같이 식량문제에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정부의 공식적인 식량배급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2005년 10월 배급제도가 부활되어 1인당 500g/1일의 배급량이 공급되었다. 그러나 WFP의 조사에 따르면 배급은 일정치 않고, 곡물 잉여지역과 부족지역, 접근성이 높은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제약들에 의해 식량배급에서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영양상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영양실조 비율은 WHO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2004년 10월 북한정부, UNICEF, WFP가 공동조사한 북한영양상태평가에 따르면, 6세 이하 아동의 37%가 발육부진(stunt), 23%는 저체중(underweight), 7%는 심각한 영양실조와 허약(waste)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의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양한 음식물 섭취의 부족은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부족을 가져왔다. 따라서 여성과 아동 등 영양섭취 취약계층을 위한 미량영양소 강화식품 공급을 위한 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다.

북한내 WFP 활동은 WFP의 전략목표 2, 3, 5를 지원한다.

〈표 1〉 2007년 목표

(단위: 톤)

	곡물	기름	콩류	기타	계	추정액 (백만달러)
북한 PRRO	33,605	1,657	22,384	9,247	66,893	47.8

2. WFP 지원 프로젝트와 운영

가. 개발 프로젝트 및 활동

□ 없음.

나. 긴급 구호활동

□ 없음.

다. 장기 구호 및 복구활동(PRRO)

□ DPRK PRRO 10488.0: "북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구 지원"

- 기간: 2006.6.1~2008.5.31
- 총 규모: 150,000톤

장기구호 및 복구활동(PRRO)의 수혜자 중 대략 90%는 여성과 아동이다. 500,000톤 규모의 2005년 긴급구호활동(EMOP)을 현재의 PRRO로 축소하게 되었을 때 WFP는 가장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2004년 UNICEF/WFP/북한정부의 영양 조사에 따르면 2002년 조사 이후 아동들의 영양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발육부진(37%)과 저체중(23%)은 WHO 기준을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2~2004년 사이 어머니들의 영양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어린이를 키우는 여성 3명중 1명은 대부분 영양실조와 빈혈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음식 섭취 부족은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의 부족을 가져왔다.

PRRO의 목표는 과도적인 지원을 통해 북한 당국의 복구계획 및 장기적 식량문제 해결을 돕는 데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모자건강(MCH) 프로그램, 학교 급식(SF), 지역식품생산(LFP) 등을 통해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여성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 및 영양상태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 (WFP의 전략목표 3)
- 지역식품생산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유지 가능한 생계대책 및 지역단위의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식량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정부의 노력 지원 (WFP 전략목표 2)

• LFP 역량을 구축하고 지역들이 LFP를 통해 식량지원 및 기아 감소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운영하여 식량문제를 해결한다는 정부의 장기전략 지원 (WFP 전략목표 5)

〈표 2〉 2007년 기대 결과

(단위: 명)

	구 분		계
2007년 WFP 식량지원 수혜자	여성	남성	
	1,047,145	830,087	1,877,232
MCH/보충지원에 참여하는 임산부, 수유여성	여성	아동	
	217,059	831,034	1,048,093
학교급식 수혜 아동	소녀	소년	
	212,069	212,069	424,138
취로사업 참여자	여성	남성	
	50,000	50,000	100,000

* 본 결과는 프로젝트 및 활동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를 예상한 수치

라. 특별구호활동

□ 없음.

<UNICEF>

〈표 3〉 2007년 UNICEF 자금수요 개요(북한)

(단위: 달러)

부 문	금 액
보건 및 영양	6,450,000
식수 및 환경 보건위생	2,600,000
교 육	950,000
계	10,000,000

1. 심각한 아동문제

북한 당국의 통계에 따르면 1993년에서 1998년 사이에 유아사망률이 1,000명당 14명에서 23명으로 증가하였으며 5세 미만 유아 사망률도 27명에서 55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아동 사망률의 증가는 식수 및 보건위생 시스템의 저하와 필수 의약품의 부족에 따라 아동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보건체계의 역량이 떨어졌고 극심한 식량난에 기인한다. 100%에 달하는 모든 주민들이 향상된 식수원에 접근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도관은 노후화되어 있으며 매우 취약한 상태로 빈번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 현지 관찰에서 확인하였다. 또한 급수체계는 대부분이 양수기가 필요하고 필요한 연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가 불규칙하다. 결과적으로, 설사가 많이 발생해 영양실조를 야기하고, 아동사망의 주요 요인인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규모 지원 덕분에 지난 10여년 동안 아동영양실조는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 2004년 작성된 영양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04년 사이, 심각한 영양실조는 16%에서 7%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성적인 영양실조는 62%에서 37%로, 저체중은 60%에서 23%로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영양실조 수준은 여전히 WHO의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더욱이, 2002년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들 가운데 1/3이 영양실조와 빈혈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및 어머니와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

초등 및 중등학교는 무상의무 교육이다. 17세까지의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경제난은 교과서와 학용품, 겨울철에 필요한 난방연료 등의 부족을 초래했다. 교육방식도 뒤처져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기초보건, 식수, 교육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취약한 정부부처의 관리능력은 투입물의 이전과 프로젝트 이행 진전에 제약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역량구축 노력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2006년의 주요 활동 및 성과

지역, 국가, 국제 파트너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 UNICEF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영양, 식수 및 보건위생, 교육 분야에 우선순위를 맞추었다. 아동사망률과 모성건강과 같은 분야의 목표달성에서 요구되는 대규모 투자의 부족으로 이러한 분야는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보건과 영양, 정기예방접종 서비스는 유지되고 있고, DPT3 백신 접종률은 82%에 달하고 있다. 또한 1세 이하 유아의 90% 이상에게 결핵, 소아마비, 홍역과 B형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Alliance)의 지원으로 DPT-hepB 백신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었으며 2007~2011년 기간동안 예방접종확대사업(Eexpanded Programme on Immunization)을 전개하고 있다. 약 5,000명의 EPI 관리자들이 백신 다루는 법을 교육받았다. 500명의 지역의사들에게 출산전 임산부를 돌보고, 출산과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왕진가방이 지급되었다. 수술실은 복구되었으며 5개 지역의 산부인과 병원에 수술실이 설치되었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의 지원으로 전체 주민의 약 60%를 담당하는 2,800개의 보건시설들은 정기적으로 기본의약품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40%의 주민들을 담당하는 보건소에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식수와 보건위생과 관련하여, 2006년 한해 동안 소도시 및 목표 군에 거주하는 350만명의 주민들이 중력공급식 급수체계 구축과 수동펌푸 시추, 부품과 소독물질의 제공 등을 통해 깨끗한 식수와 보다 정기적인 급수공급을 받을 수 있었다. 20 곳의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1만여 어린이들이 개선된 보건위생시설의 혜택을 받았다. 중력공급식 식수공급 시스템을 설계하고 실시하는 도시관리성 관계자들의 능력은 4개 군에서의 현장경험뿐만 아니라 9개 도와 중앙의 15개 담당부서의 심도 있는 훈련을 통해 강화되었다. 산이 많은 북한지형에서 이러한 식수 공급 기술의 확대는 수원 공급에 적합하고 또한 연료를 필요로 하는 펌프식 시스템보다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설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UNICEF는 교육분야에 중요한 지원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종이와 인쇄 부품 제공으로 10만여 학생들에게 기본 교과서가 제공되었다. UNICEF가 더 좋은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7개의 목표 군에서는 7개 학교에 있는 7,000명 이상이 새로운 학교비품을 제공받았다. 학습평가 프로젝트는 20개의 시범 학교에서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으며, 북한당국의 예산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초등 및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평생 기능중심의 교육을 도입하고 건강법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으로 먼저 초등학교용 보건 및 건강촉진을 위한 컬러풀한 매뉴얼을 만들었다.

3. 2007년 인도적 지원활동 계획

북한에서 UNICEF의 지원은 국가차원 그리고 선정된 목표 군에 대한 참여라는 2중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UNICEF는 기초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과 방향을 구축, 강화하며, 예방접종, 구충제와 비타민 A 공급 등과 같은 국가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할 것이다. 제한된 수의 목표 군에서는 제한된 자원으로 보다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별 계획에 초점을 맞추며 후에 이용가능한 북한 당국의 자원이나 외부자원으로 이를 확대하거나 추진할 수 있는 개혁이나 모델화를 고려하고 있다.

□ 보건 및 영양(6,450,000달러)

모든 아동, 특히 5세 이하의 아동들은 다음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 전국적 차원

- 모든 항원형성을 위한 높은 예방접종 유지(90% 이상)
- 면역성 달성과 추가적인 보건사업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과 기타 파트너들과의 협력확대
- 약 1,400만명을 담당할 수 있는 2,800개 이상의 보건소에 필수의약품 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보, 공급
- WHO 및 IFRC와 공동으로 향후 3년 동안 필수의약품의 조달 규모를 낮추기 위한 전략개발
- 아동들의 설사를 치료하기 위해 지역별 구강수분보충염(ORS) 생산을 지원(매년 700만개 주머니(sachets) 생산을 목표. 지역 필요량의 약 90%)

- 30만명으로 추정되는 모든 임산부들에게 영양보충식, 임신전 여성에게 철분/엽산, 임신 6개월까지는 복합미량영양소, 출산 여성에게는 비타민 A를 공급
- 5세 이하의 모든 아동(약 200만명으로 예상)에게 매년 2차례씩 비타민 A와 구충제를 확보, 공급
- 약 300만명에 달하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구충제 관리
- 아동 및 여성에 대한 인식과 보호관행을 높이기 위해 'Family Book'을 최소 25만부 추가로 인쇄 및 배포
- 요오드화(salt iodization) 실태에 대한 인식제고와 요오드화염(iodized salt)의 생산 증대
-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의 성장관찰 지원

○ 선정된 목표 군

- 10개 군의 탁아소 및 가정 수준에서 급식 및 보호관행의 수준제고를 지원
- 최소 3개의 목표 군에서 '어린이질병종합관리(Integrated Management of Childhood Illness)' 체계를 확대
- 10개 목표 군에서 건강관리정보시스템(heal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강화
- 선정된 군에서 새로운 WHO 보건관리차트 이행
- 새로 결혼한 부부들에게 아동 보호, 임신전후 여성보호, HIV/AIDS에 대한 인식제고 등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일련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개발
- 30개 군의 수유 여성, 임산부 및 아동보호시설에 분배하기 위한 약 36,000톤의 혼합식품을 WFP와 함께 생산하기 위해 비타민과 미네랄 조달

□ 식수 및 환경보건위생(2,600,000달러)

초등학교, 유치원, 탁아소 등과 같은 시설에 있는 아동을 포함한 약 500만에 달하는 주민들은 다음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 국가적 차원

- 도심지역 5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식수 화학처리기 및 예비 부품 공급

• 중력공급식 식수공급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1,000명의 수자원 기술자와 전문가를 훈련

○ 선정된 목표 군

• 중력공급식 식수공급 시스템의 건설 경험을 매뉴얼에 실어 국가가 시행하는 교육훈련에 이용
• 두 개의 대상 군에서 물공급 체계를 복구/건설해 중력공급식 시스템을 통해 80,000여명의 주민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
• 10,000명의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개 아동보호시설에 식수 및 보건위생시설 복구
• 10개 대상 군에서 시범적인 가구화장실을 건설하고 가구의 위생을 제고하는 것을 지원
• 대상 군에 있는 2개의 역학조사(anti-epidemiological) 관측소에 이동가능한 수질감시실험실을 설치해 감시능력을 제고
• 수동펌프식 우물 시추공 100개를 설치하여 마을 단위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30,000여명의 아동에게 안전한 식수 제공
• 식수공급과 위생환경시설이 개선된 50개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촉진

□ 교육(950,000달러)

총 200,000명의 아동들이 다음 조치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

○ 국가적 차원

• 전국의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 150,000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서를 복사할 수 있는 150톤의 종이 등 학교기본용품을 제공
• 50명의 교육성 관리들의 전문지식을 증대시키기 위해, 보건과 위생에 초점을 맞추면서 교과과정개정, 연수교육, 평생기능중심의 교육과 같은 사업들을 개발하고 시범학습평가를 확대

○ 선정된 목표 군

• 목표 군에 있는 최소 5개 초등학교/유치원에 책걸상과 같은 교육기본설비를 공급하는 한편 식수, 위생보건 시설 및 주방의 개선, 이중 유리창 설치 등의 종합적인

복구 지원(약 10,000명의 아동들 수혜)

- 20개 학교에서 교육과정 개정, 연수교육, 평생기능중심의 교육 등 교육의 질 제고와 관련된 활동을 시범적으로 실시해 이러한 경험들을 국가교육정책 입안자들에게 제공

경제자료

6자회담 합의의 내용과 의미

본 자료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한미경제연구소(KEI), 아시아소사이어티가 공동개최한 초청강연회에서 미 국무부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2·13 합의가 이루어진 후인 지난 2월 22일 워싱턴 D. C.에서 "UPDATE ON THE SIX-PARTY TALKS"라는 주제로 열린 이 강연회에서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는 2·13 합의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향후 일정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자료원: http://www.brook.edu/comm/events/20070222hill.pdf/

이번 6자회담은 적절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접근하였다고 생각된다. 2005년의 9·19 공동성명은 한반도 비핵화에 모든 관련국들이 동의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였지만, 이 합의내용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최종적으로 어떤 것도 달성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2005년 9월 공동성명의 내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고 북한은 우리에게 이 방안을 반영시킬 수 있는 상당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보다 긴밀해진 것이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사업에서 손을 떼기 위해서는 전략적 결정을 할 필요가 있지만 이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리는 최종 결정하였다. 북한이 하루아침에 이 사업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하였다고 선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북한은 단계별로 진행시킨다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한 단계 나아가서는 뒤를 돌아보면서 전번보다 좋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단계별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디오를 중지하고 어떤 한 단계를 보면 기본적인 문제의 일부를 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할 여지가 많다. 우리는 결코 최종단계를 달성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 낸 것은 60일이라는 단기적 시한을 설정한 것이다. 이를 설정하기

위해 상당한 논의와 협상이 필요하였지만 60일 이내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일차적인 비판은 이미 추출된 50kg 상당의 플루토늄에 관한 것이다. 풀루토늄의 반감기가 70만년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55kg 혹은 100kg의 문제가 아닌 50kg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조치로 핵시설을 폐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우리는 다음 단계로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해체한 다음 최종적으로는 이를 없앤다는 것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핵시설이 가동되고 있는 동안 이를 해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것을 우선 폐쇄하는 것을 생각하였다. 당신이 어떤 논리과정을 멈추겠다고 생각한다면 먼저 이 논리과정을 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된다.

우리는 IAEA가 북한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은 현재의 기술수단으로 폐쇄를 감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핵시설의 가동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현지에 들어가 북한이 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IAEA의 복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초기 60일 내에 이행하기로 합의한 또 다른 사항은 많은 실무그룹(working groups)을 설치하며, 2005년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합의한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목록에 대해 협의를 시작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 포기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한 선언을 할 때에는 이 선언이 완벽한 것이기를 원하고 있다.

물론 이 협의에서 고농축우라늄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이 고농축우라늄과 전적으로 관련된 설비를 일정부분 구입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나도 본 적이 있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실제로 구입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설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습득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생산기술도 요구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구입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독일에서 알루미늄 관(tubes)을 구입하려고 하였다. 실제로 이 관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있었다. 북한이 다른 곳에서 이 관의 일부를 구입했다는 징후도 있다. 그런데 이것들은 북한이 구입한 파키스탄 설계의 원심분리기에 맞는 관들이다.

따라서 어느 선에서 이 설비와 관련된 것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관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관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

나는 북한과 접촉할 때마다 특히 모든 6자회담에서는 고농축우라늄 문제를 제기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고 합의하였다. 한편 북한이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싶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협의하고 상호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고농축우라늄문제를 상호 만족할 수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의하는 데 합의를 보았다.

6자회담 접근방식의 기본구상은 핵문제나 에너지문제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는 이 지역의 긴장요인들을 다루려고 한다. 궁극적인 성공여부는 시간이 말해 줄 것이지만 우리가 일부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작하려는 것은 확실하다. 비핵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북한의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실무그룹 외에도 북미 양자관계를 위한 실무그룹도 설치하게 될 것이다. 이 실무그룹의 목적은 2005년 공동성명의 완전한 합의, 즉 비핵화를 달성하면 공동성명의 또 하나의 내용인 북미관계 정상화 과정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 과정에 착수해 과정의 종착지인 관계정상화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벗어나는 데 큰 관심을 가져 왔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과정에 착수할 것이다. 이것은 반복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며 그들에게서 일부 응답도 필요하다. 우리는 이에 대해 그들과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미양자회담 외에도 북일양자협상이 계획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 측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 이 중 일본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납치문제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문제가 즉각 해결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본과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다. 이것은 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본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25년 전 다양한 이유로 납치된 사람들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것을 명백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일본과 북한이 함께 마주해 관계정상화의 전망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주요 관심사항을 처리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미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이 설치될 것이다. 동북아 평화와 안보실무그룹은 이 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와 이 지역에서 다자간 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등을 계획하는 것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나는 동북아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성공적인 지역의 하나로 다자간 기구의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종종 언급해 왔고 이를 강하게 믿고 있다. 우리는 6자회담이 일종의 초기 기구일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비핵화라는 어려운 과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6자

회담이 다른 과제로 전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이 지역의 험난했던 역사를 당신은 모른다고 종종 말하곤 한다. 물론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험난했던 역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험난했던 역사를 가졌던 다른 지역도 있다. 유럽이 그렇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다자간 구조라는 것이 유럽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경우 참으로 인상적이다. 이러한 점은 동북아시아에서 새겨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 무언가를 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실무그룹을 30일내에 작동시키려 한다. 모든 것이 30일내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2·13 합의의 내용이다.

미국이 이행하기로 합의한 또 하나의 내용은 30일 이내에 마카오에 있는 뱅코델타아시아(Banco Delta Asia)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18개월 동안 조사한 것, 미 은행이 이 은행과 거래하는 것을 경고한 미국의 조치를 종료하게 될 것이다. 솔직히 이 은행이 돈세탁과 기타 행위에 관해 국제금융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30일내에 우리 쪽 입장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래서 우리의 의도를 중국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60일 동안 이행될 야심찬 아젠다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3월 19일이 있는 그 주나 월요일인 3월 19일에 함께 모여 30일 동안의 행동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및 에너지 협력그룹, 동북아 평화와 안보그룹, 북일, 북미 그룹이 만났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이러한 그룹들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우리는 남은 30일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60일 후에 핵시설이 폐쇄, 봉인되는 것을 보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현장에서 국제감시요원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비핵화실무그룹을 통해 9월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기로 한 최종 핵 프로그램 목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북한과의 협의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양자간 실무그룹들이 만나서 합의를 보고 더욱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다. 마지막으로 60일 종료시점까지 5만톤의 원유가 선적되어 북한 발전소에 인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60일 이후에는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다음 국면에서는 우리 쪽에서 상당량의 원유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원유의 제공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현 시장가격으로 약 220백만달러에 상당하는 95만톤의 추가적인 원유에 대한 논의이다. 이에 대한 비용은 러시아, 중국, 남한, 미국이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미결 관심사안이 진전된다고 판단되면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해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러한 상당량의 원유를 분담하는 방법, 실무적인 입장에서 유의한 순서대로 북한에 제공하는 방법, 그리고 북한이 합의한 추가적인 내용에 따라 제공하는 방법 등을 생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은 두 가지 사항과 관련을 맺고 있다. 하나는 말할 것도 없이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

기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목록을 우리에게 넘겨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 단계에서 북한이 흑연감속로(graphite-moderated reactors)와 재처리공장 등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disablement)에 합의하는 것이다. 불능화는 폐쇄와 봉인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단계는 이 시설의 해체와 완전한 포기가 된다.

북한 쪽에서는 두 가지의 주요한 과제가 있다. 하나는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프로그램의 목록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의 불능화에 대한 동의이다. 우리 쪽에서는 60일 이내에 개시되는 5만톤과 함께 95만톤의 원유지원 조치에 대한 이행순서가 필요하다. 총 원유지원은 100만톤이다.

바쁠 것이고 무엇보다도 마감시한을 넘기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감시한을 넘기기 시작하면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처럼 될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한 창문이 파손되어 있으면, 많은 창문이 깨져 있을 것이고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시한에 신경을 쓰고 있다.

모든 당사국들 사이에는 이 과정이 잘 진행되어야 한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사실에 유의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10월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다고 알고 있는 50kg 상당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도 유의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아 있는 것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또한 고농축우라늄 문제가 명백히 밝혀지고 이 핵시설이 불능화되고 해체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유의하고 있다.

60일이 지나 이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계획은 미 라이스 국무장관이 북경에서 북한 외무상을 포함 5개국 각료들과 회담을 열고 초기 60일의 진행사항을 검토하고 다음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일종의 새롭고 지속적인 모멘텀이 제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6자회담이 60일이 지난 4월에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 중반의 잔재로 어떤 면에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 21세기인 지금 우리는 20세기 중반의 가장 슬픈 유산의 하나인 한반도 분단을 다루고 있다. 6자회담을 통해 중국, 미국, 남북한이 서로 마주 앉아 한반도의 정전을 종식시키고 이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6자회담은 이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과정이며 비핵화는 이러한 문제의 하나이다.

부문별 주요동향 (2.1~2.28)

1. **대내경제** ····· 45
국내 연구진, “북 아동 성장 지체, 여자는 비만 위험” ····· 45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46
평양 상수도 현대화 공사 완료 ····· 47
에너지개발 사업 계획적으로 진행 ····· 47
지질탐사사업 활발히 진행 ····· 48
김정일 위원장, 청진광산금속대학 현지지도 ····· 48
김정일 위원장, 어랑천1호발전소 및 장연호양어장 현지지도 ····· 49
김정일 위원장, 청진기초식품공장 및 군민발전소 현지지도 ····· 49
경공업 공장, 인민소비품생산 박차 ····· 50
자금세척방지법 채택 ····· 50
한국은행, “북 계획경제 이완, 개인소득은 증가” ····· 51
「로동신문」, 과학기술중시 강조 ····· 51

2. **농업 및 식량** ····· 52
북, 타이로부터 쌀 수입 추진 ····· 52
국가차원 양돈사업 본격화 ····· 52

3. **대외경제** ····· 53
중, 핵실험 뒤 대북투자 전면중단·교역량은 증가 ····· 53
북 달러위조로 최대 2,500만달러 수입 ····· 54
일 언론, “북, 참치 수출로 외화 힉득” ····· 55
러, “북 채무 90% 탕감” ····· 55
WHO, “한국정부 지원으로 북한 의료체제 크게 개선” ····· 56
UNICEF, 북한 홍역예방 백신 제공 운동 실시 ····· 56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 57
개성공단 누적생산 1억달러 돌파 ····· 57
대통령, 6자회담 관련 ‘남는 장사’ ····· 58
정부 고위당국자, “쌀·비료 한꺼번에 줄 수 없다” ····· 58
정부, 대북 중유지원 준비 착수 ····· 59

5. **북한 · 주변국가 관계** ····· 59
북미, BDA 실무회의 종료 ····· 59
「조선신보」, "BDA문제, 미 국무부-재무부 입장 달라" ····· 60
일, 북핵 회담 진전 있어도 지원 안할 것 ····· 61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과 중유제공 협의한 적 없어" ····· 61
일 언론, "북, 중유 50만톤 요구" ····· 62
미, 북한 민주화 지원비 200만달러 첫 책정 ····· 62
마카오, 대북 금수조치 ····· 63
미 국무부, "2008년초까지 북핵 협상 완료" ····· 64
미 국무부 차관보, "미 재무부 BDA 조사 종결원해" ····· 64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 65
일, 북 원자로 가동중단 및 사찰수용 요구 ····· 65
미, 중국에 대북 금융제재 일부 해제 용의 통보 ····· 65
6자회담 개막, 이행 및 상응조치 관련 의견 교환 ····· 66
미 국무부, "북핵 해결은 다단계 절차" ····· 66
「조선신보」, "미, 되돌릴 수 없는 적대정책 포기해야" ····· 67
일 언론, "미, 조만간 대북 금융제재 일부 해제" ····· 68
「조선신보」, "핵폐기에 상응하는 에너지 담보조치 취해야" ····· 68
미 국무부 차관보, "30일내 BDA 제재 해결, 6자에 통보" ····· 69
2·13 북핵 합의 관련 각국 반응 ····· 70
미 대통령, "북 2·13 합의 이행하면 식량지원 재개" ····· 71
외교통상부, 6자회담 합의문 공개 ····· 71
북,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준비" ····· 74
미 대통령, "북 핵폐기 약속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 74
국정원, "북, HEU 프로그램 있다" ····· 74
미 국무장관, "북한 HEU 문제 철저히 추궁할 것" ····· 75
정부 고위당국자, "HEU, 북핵 협상 걸림돌 안돼" ····· 75
북, IAEA 사무총장 초청 ····· 76
BDA 북 계좌 일부 해제 임박 ····· 77

1. 대내경제

국내 연구진, "북 아동 성장 지체, 여자는 비만 위험"

2월 1일 「연합뉴스」는 서울대 박순영(인류학) 교수가 1999년 8월부터 2006년 4월 사이 탈북한 2~20세 어린이와 청소년 1,192명을 상대로 측정한 입국 당시의 신장과 체중 등을 조사한 결과, 북한 남녀 어린이의 성장 지체가 심각하고 상당수 여자 어린이는 비만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대별 신장을 미국인 표준치와 비교한 Z값(HAZ)은 -1.45였으며 박 교수는 HAZ가 -1.45라는 것은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의 신장별 체중이 미국 어린이와 청소년 신장별 체중 분포의 하위 7% 수준에 속해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 연령대별 체중을 미국 표준치와 비교한 Z값(WAZ)은 -0.98로 하위 16%에 해당. 박 교수는 남자의 경우 10~12세, 여자의 경우 12~14세부터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의 HAZ가 급격히 하락한 것을 두고 북한 청소년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만성적인 영양 부족 등으로 성장 폭이 줄고 시기도 늦춰질 것이라고 추정.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의 HAZ는 여자가 -1.35(하위 9%)인데 비해 남자는 -1.55(하위 6%)였고, WAZ도 여자가 -0.78(하위 22%)이지만 남자가 -1.17(하위 12%)로 측정돼 키와 몸무게 모두 남자 어린이의 성장 지체가 두드러졌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한편 여자의 경우 신장에 비해 체중 발육 지체가 덜해 체질량을 미국 표준치와 비교한 Z값(BMIZ)이 -0.03(하위 49%)으로 미국 표준과 거의 비슷하며 HAZ가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장차 비만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박 교수는 "남·여 어린이 모두 신장 성장이 심각하게 지체돼 있고 여자 어린이는 키는 작은 데 비해 체질량이 높아 비만의 위험도 있다"며 "신체 발육 지체는 통일 후 남한 청소년들과 어울려야 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박 교수는 다만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2~14세)의 신장별 체중 Z값(WHZ)이 0.14로 미국 어린이와 청소년 신장별 체중 분포의 상위 44%에 해당돼 급성 영양실조의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 특히 탈북 어린이와 청소년 가운데 탈북에서 입국까지 걸린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Z값은 0.33으로 상위 37%에 해당. 그는 이처럼 탈북 청소년의 WHZ가 양의 값을 갖는 데다 남한 어린이와 비교할 때 10세 이하는 체중과 신장에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체중이 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북한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는 아니라고 진단. 박 교수는 "북한 어린이들이 급성 영양실조는 아니지만 만성 영양부족을 겪고 있으므로 단기적 응급구호나 원조활동보다는 북한 전체의 경제적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1).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2월 2일 「중앙통신」은 내각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되었다고 밝히고 회의에서는 2006년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총화와 올해 공동사설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고 밝힘. 이 통신은 부총리 곽범기의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지난해 경제건설분야에서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약의 발판이 마련된데 대하여 언급되었다고 전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경제강국건설은 현시기 우리 혁명과 사회발전의 절박한 요구이며 강성대국의 체모를 갖추기 위한 보람찬 역사적 위업"이라고 지적하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전을 힘 있게 벌려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였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 아울러 회의에서는 "지난 시기와 다름없이 농사를 천하지대본으로 더욱 튼튼히 틀어쥐고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다"고 이 통신은 전함. 회의에서는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농업생산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영농물자와 자재들을 집중적으로 보장하며 미루벌을 튼튼한 알곡생산기지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더욱 힘 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고 대책하였다고 이 통신은 밝힘. 회의에서는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5돐이 되는 올해에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고 모든 부문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결정적으로 늘여 혁명적 명절들을 홍성거리게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도 제기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통신은 인민경제의 4대 선행부문인 전력, 석탄, 금속공업과 철도운수를 더욱 발전시키고 채취, 기계, 화학, 건재공업과 임업부문에서 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들어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그 수행을 위한 대책들이 회의에서 언급되었다고 밝힘. 회의는 "선군시대의 대기념비적 건축물들을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질적으로 하며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과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인민경제의 기술개건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혁명적으로 밀고나가며 교육, 보건, 문학예술을 발전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과업들도 제시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회의에서는 모든 부문과 단위들에서 우리 식 사회주의의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으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 자력갱생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였으며 해당한 결정을 심의하고 채택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는 총리 박봉주를 비롯한 내각성원들과 성의

부상들, 도, 시, 군인민위원회 위원장들과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들, 중요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참가하였다고 이 통신은 덧붙임(「중앙통신」, 2.2).

평양 상수도 현대화 공사 완료

2월 3일 「중앙통신」은 평양의 상수도 현대화 공사가 완료돼 평양 시민들이 앞으로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마시게 됐다고 보도. 「중앙통신」은 "평양시 상수도 개건 대상공사가 끝났다"면서 "이로써 현대적인 설비들과 정보 수단들에 토대한 물 생산과 공급이 높은 수준에서 진행되게 됐다"고 밝힘. 한편, 평양시 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200km에 이르는 송수관의 부분적인 교체와 용수처리시설, 펌프장의 보수 작업 등으로 총 공사비가 5천만달러를 넘었지만 쿠웨이트로부터 기금 지원을 받아 이뤄졌다고 「중앙통신」은 밝힘(「중앙통신」, 2.3).

에너지개발 사업 계획적으로 진행

2월 5일 「중앙통신」은 북한에서 에너지 개발사업이 전망성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 통신은 국가과학원 자연에네르기개발리용쎈터 소장 김경봉의 말을 인용하여 "전국각지에서 풍부한 에네르기자원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연구와 탐사사업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수력자원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임. 통신은 "최근년간에만도 삼수발전소와 녕원발전소언제가 일떠서고 도처에서 대규모수력발전소건설이 힘 있게 벌어져 가까운 앞날에 완공할 수 있는 전망이 열려지고 있다"고 밝힘. 또한 정평군과 연사군을 비롯하여 물이 흐르는 곳마다에 중소형발전소를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하면서 전국의 석탄매장지들에서 탄밭을 더 많이 마련하기 위한 탐사와 굴진을 적극 앞세워 나라의 긴장한 동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한 활동도 힘 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함. 아울러 기관, 기업소, 농촌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게 태양열을 이용하는 온실들이 꾸려져 결실을 내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함. 통신은 "황해북도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비롯하여 각지의 농촌살림집들에서는 생물질에 의한 메탄가스의 생산리용이 널리 일반화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각이한 능력의 풍력발전기들을 생산도입하여 농촌과 산간지역들에서 가정용전력을 원만히 해결하며 저열탄과 연재탄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임. 한편 태양과 생물, 조수력 등 자연에너지를 보다 광범히 이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도 적극 추진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중앙통신」, 2.5).

지질탐사사업 활발히 진행

2월 6일 「중앙통신」은 북한에서 지질탐사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최근 국가자원개발지도국에서는 지질전문가들과 정보기술자들, 탐사대원들을 검덕, 갑산지구에 파견하여 유색금속광물자원을 더 많이 찾아내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 있다"고 보도. 통신은 중요건설대상들에 대한 지반탐사작업을 다그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매장량이 풍부한 탄광, 광산개발후보지들을 계속 찾아내고 세부탐사대상지들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힘. 통신은 황해남도탐사관리국에서는 서해안지역의 모래성분을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앞으로 수 백년 동안 채취할 수 있는 모래원천지를 찾아냈으며 평안남도, 함경북도탐사관리국에서도 나라의 서부지구와 북부지구에 대한 석탄탐사작업을 줄기차게 내밀어 전망이 좋은 무연탄 및 유연탄매장지들을 더 확보하였다고 밝힘. 또한 "황해남도, 자강도, 황해북도, 강원도탐사관리국산하 지질탐사대들에서도 도안의 중요 지하자원에 대한 탐사작업을 다그침으로써 더 많은 유색금속을 채취할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고 이 통신은 전함. 통신은 "함경남도탐사관리국에서는 국가적 의의를 가지는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하여 지반탐사와 설계 작업을 빠른 기간에 완성하였으며 량강도탐사관리국산하 수문지질탐사대와 백암지질탐사대에서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를 비롯한 중요대상건설에 참가하여 탐사작업과 주입작업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고 전함(「중앙통신」, 2.6).

김정일 위원장, 청진광산금속대학 현지지도

2월 7일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청진광산금속대학을 현지지도 하였다고 보도. 김 위원장은 "청진광산금속대학은 믿음직한 기술인재양성의 전당으로 자라났다"고 밝히고 대학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이 통신은 전함. 김 위원장은 "대학 교직원들은 우리의 과학기술을 최단기간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데 대한 당의 의도를 언제나 명심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끊임없이 개선강화하여 재능있는 과학기술인재를 더 많이 육성하여야 한다"고 지적. 한편 현지지도에는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남기가 동행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함(「중앙통신」, 2.7).

김정일 위원장, 어랑천1호발전소 및 장연호양어장 현지지도

2월 8일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새로 건설된 어랑천1호발전소와 장연호양어장을 현지지도 하였다고 보도. 어랑천1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한 김 위원장은 "어랑천발전소건설에서 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기조업을 앞당겨 보장한 것은 실리주의원칙에 맞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밝혔다고 이 통신은 전함. 이어서 어랑천언제건설장을 방문한 김 위원장은 "최근년간 우리는 어려운 조건에서도 도처에 출력이 높은 많은 발전소들을 건설한 결과 전력생산에서 급격한 장성을 가져왔다"고 밝히고 "이 자랑찬 전변은 대규모수력발전소와 함께 중소규모수력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할 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의 뚜렷한 증시로 된다"고 밝힘. 장연호양어장을 현지지도한 김정일 위원장은 양어사업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광범히 벌리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이 통신은 전함. 김 위원장은 "함경북도는 금속공업, 채취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선행부문의 기업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밝히고 "경제강국건설에서 선봉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고 이 통신은 전함. 한편 금번 현지지도에는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남기가 동행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함(「중앙통신」, 2.8).

김정일 위원장, 청진기초식품공장 및 군민발전소 현지지도

2월 8일 「중앙통신」은 김정일 위원장이 청진기초식품공장과 새로 건설된 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하였다고 보도. 청진기초식품공장을 현지지도한 김 위원장은 개건정형과 생산실태를 살펴보고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인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어야 한다"고 밝힘. 김 위원장은 "기초식품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기본열쇠는 원료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협동농장들에 튼튼한 원료기지를 꾸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세밀히 짜고들며 농장원들의 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더 많은 원료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고 이 통신은 전함. 이어서 새로 건설된 군민발전소를 현지지도한 김 위원장은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여 발전소를 만부하로 돌려야 한다"고 밝히고 관리운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였다고 이 통신은 전함. 한편 금번 현지지도에는 조선로동당 함경북도위원회 책임비서 홍석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박남기가 동행하였다고 「중앙통신」은 전함(「중앙통신」, 2.8).

경공업 공장, 인민소비품생산 박차

2월 9일 「중앙통신」은 북한의 각지 경공업공장 근로자들이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울 데 대한 공동사설과업관철에 떨쳐나섰다"고 보도. 통신은 "뜻깊은 명절들을 맞는 올해에 인민들에게 더 많은 소비품이 차례지도록 하기 위하여 경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에서는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여 소비품의 가지수를 늘이고 질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평양시안의 경공업공장들인 룡성영예군인사출장화공장, 평양양말공장, 선교편직공장에서는 색깔 곱고 질 좋은 사출장화와 양말, 편직천들의 생산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전함. 또한 생산과 과학기술을 결합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해온 평안북도안의 경공업공장들이 지금 소비품생산에서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이 통신은 전하면서 특히 박천견직공장의 담요생산공정이 성과를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조선인민의 생활풍습과 감정에 맞는 여러 가지 문양의 새 담요가 쏟아져나오고 있으며 신의주화장품공장에서는 사람들에게 젊음을 더해주는 기능성 화장품들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도. 통신은 신의주신발공장, 신의주법랑철기공장들에서도 맵시있고 질 좋은 신발들과 백색도가 높은 법랑그릇들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전하면서 함흥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로동계급은 코트형, 잠바형 등 갖가지 형태의 비옷을 만드는 한편 생산제품의 가지수를 늘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힘. 한편 평양기초식품공장, 강계기초식품공장, 해주기초식품공장, 북창기초식품공장 등 개건확장된 각지의 기초식품생산기지들에서는 맛좋고 영양가 높은 간장, 된장 등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중앙통신」, 2.9).

자금세척방지법 채택

2월 20일 「경향신문」은 국가정보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2005년 9월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치 후 금융거래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다"면서 "작년 10월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政令)으로 '자금세척방지법'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이 법은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기업·단체·개인에 대해 위폐·마약·무기밀매나 불법 부동산 및 귀금속 거래 등을 통한 불법자금 조성과 이 자금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가명계좌 개설 금지와 불법의혹 자금거래 확인의무를 부여했다고 국가정보원은 전함(「경향신문」, 2.20).

한국은행, "북 계획경제 이완, 개인소득은 증가"

2월 23일「연합뉴스」는 북한의 계획경제가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이완돼 국가가 주민 생존을 책임질 수 없게 됐으나 개인 소득은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탈북자 335명을 대상으로 설문과 심층 조사를 벌여 최근 발표한 '탈북자를 통한 북한경제 변화상황 조사'에서 23일 밝혀졌다고「연합뉴스」는 전함. 7.1조치 이전(1997~1999년)과 이후(2004~2006년)로 나눠 실시한 이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의 42%가 직장 생활을 했으나 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7.1조치 이전 7.5%에서 이후 5.0%로, 장사소득은 이전 91.1%에서 이후 88.1%로 각각 다소 줄었다는 것. 반면 친척의 도움이나 가축사육 등 비정상적인 부업을 소득 원천으로 삼았던 탈북자 비중은 7.1조치 이전 1.4%에서 이후에는 6.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연합뉴스」은 전함. 북한에 있을 때 직장에 정상 출근했다고 답한 경우는 7.1조치 이전은 60.5%에서 이후에는 52.5%로 감소한 대신 적만 두고 출근하지 않거나 부업 등 다른 일을 한 경우는 39.5%에서 47.5%로 늘어 경제관리체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연합뉴스」는 전함. 그러나 7.1조치 이후 탈북자들의 1인당 소득은 1997~1999년 5~6달러에서 2004~2006년에는 19~22달러로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1인당 월평균 지출규모도 7.1조치 이전에는 5~6달러로 소득을 모두 써야했으나 조치 이후에는 10~14달러로 늘어나 다소 여윳돈도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고「연합뉴스」는 전함. 식량배급 감소에 따른 부족식량 확보방법은 7.1조치 이전 시장 구입(71.7%), 텃밭 등 자력 확보(23.6%), 친척지원이나 밀수 등 기타 방법 확보(4.7%) 등에서 조치 이후에는 각각 69.6%, 27.4%, 3.0% 순으로 '자체 해결' 비중이 증가했다고「연합뉴스」는 전함. 조사를 담당한 연구원 동북아경제연구실 이영훈 박사는 "최근 탈북자 가족이나 무직자의 탈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북한의 계획경제가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7.1조치 이후에도 생산주체인 기업의 생산활동이 저조해 국가가 주민의 생존을 책임지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다"고 진단. 그는 아울러 "최근 탈북자의 소득 및 소비수준이 과거보다 크게 향상됐고 탈북자들이 평가하는 북한 주민의 소비 수준도 이전에 비해 높아지긴 했으나 주로 시장경제와 연계된 부업이나 개인생산 확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분석했다고「연합뉴스」는 보도(「연합뉴스」, 2.23).

「로동신문」, 과학기술중시 강조

2월 27일「로동신문」은 논설을 통해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

가기 위하여서는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 논설의 필자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은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에 의거할 때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 수 있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중시로선을 관철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로 된다"고 밝힘. 또한 "오늘날의 자력갱생은 현대적인 과학기술이 안받침된 자력갱생이다"라고 밝히고 "가까운 앞날에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당의 방침들을 철저히 관철하려면 과학기술발전을 앞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 또한 논설에서는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은 경제강국건설의 군사적 담보를 튼튼히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고 밝히면서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하여 자위적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져나갈 때에만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밝힘(「로동신문」, 2.27).

2. 농업 및 식량

북, 타이로부터 쌀 수입 추진

2월 14일 「노컷뉴스」는 타이 상무성의 한 관리가 자유아시아방송 기자와의 전화 대화에서 북한이 타이산 쌀수입 재개를 타진해 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북한이 현재 쌀 수입 대금 미화 8천3백만 달러의 미수금과 관련한 것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 이 관리는 또 북한이 쌀수입을 원하면서 미수금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미수금을 지급한다면 북한에 쌀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힘. 타이는 2005년 당시 칸타티 수파옹콘 외무장관이 북한과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북한의 백남순 외상을 방문했을 때 미수금인 8천3백만 달러를 현물로 상환할 것을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컷뉴스」는 전함(「노컷뉴스」, 2.14).

국가차원 양돈사업 본격화

2월 26일 「연합뉴스」는 주민들이 섭취할 육류를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북한이 세계적인 돼지 육종회사인 PIC의 중국 현지법인인 'PIC 차이나'를 통해 육종용 돼지를 수입하기 시작, 국가 차원의 양돈사업을 본격화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고 보도. 베이징의 북한 소식통 등에 따르면, PIC 차이나는 지난해 12월 말 중국의 옌볜캉룬(延邊康潤)경제무역공사를 통해 북한의 조선고려상사와 양돈분야 협력에

합의하고 PIC 조모돈(祖母豚) 300마리와 씨돼지 격인 조부돈(祖父豚) 15마리의 대북 수출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조선고려상사는 백화점, 호텔 등 대형 국영기업에 대한 물자공급을 담당하는 무역부 산하 회사이며, 옌볜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에 있는 옌볜캉룬공사는 북한, 러시아, 한국, 일본 등을 대상으로 모터차 부품, 건자재, 밀가루 등을 수출하고 폐비닐, 폐철, 폐지, 광석 등을 수입하는 회사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북한은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고기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질 좋은 고기를 생산하는 육종용 돼지 수입을 통한 대규모 시범 양돈사업을 정부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정해 앞으로 1,500마리 안팎의 PIC 모돈(母豚)을 더 수입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는 북한이 수입 돼지에 의존해 온 지금까지의 방식을 벗어나 향후 자체적으로 양돈사업을 본격화, 돼지고기를 자급자족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점차 규모화 양돈의 시대로 접어들게 됨을 의미한다고 소식통들은 밝힘. 북한이 각 축산목장과 돼지공장(양돈장) 등에서 염소, 토끼, 돼지, 오리, 거위 등의 사육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가운데 함경남도는 올해 주력할 경제과제에 돼지공장 건설을 포함시켰으며, 「조선중앙방송」은 지난해 9월 자강도 강계시 신흥지구에 연면적 1만9천200여㎡ 규모의 돼지공장이 건설된다고 보도한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북한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 2005년 12월 인민군이 건설한 돼지 원종장과 육류 냉동고를 현지지도하면서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돼지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강조. 이어 2006년 5월에는 역시 인민군이 건설한 연건평 1만㎡ 규모의 '110호 돼지공장'을 현지지도하는 자리에서 "이런 현대적인 돼지공장을 많이 건설해 돼지고기 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지시했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26).

3. 대외경제

중, 핵실험 뒤 대북투자 전면중단 · 교역량은 증가

2월 2일 「경향신문」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핵실험 실시 이후 중국이 대북 투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정부 당국자는 2일 "북한 외자 유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투자가 핵실험 이후 최근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소수의 중국 기업들이 광업분야를 위주로 북한과 소액투자 문제를 논의하는 정도"라고 밝힘. 통일부 등에 따르면 중국의 대북 투자는 2003년 100만달러 수준이었으나 이후 북한이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중국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2004년 5,000만달러, 2005년 1억달러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것. 2006년에도 증가 추세

가 이어져 1~9월에 이미 전년 수준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핵실험 이후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서 투자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투자를 꺼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반면 북중간 무역은 지난해 10~12월 북중 교역액이 4억7,613만달러로 2005년 같은 기간보다 21.6%가 늘어났으며 지난해 10~11월 북일 교역액은 790만달러로 전년 동기(3,100만달러)에 비해 75% 급감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경향신문」, 2.2).

북 달러위조로 최대 2,500만달러 수입

2월 5일 「매일경제신문」은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만들어져 유통되고 있는 위조 달러 지폐는 지난 1989년 이후 최소한 4,500만달러어치에 달한다. 북한은 이를 통해 1,500만달러에서 2,500만달러가량을 벌어들였다"고 밝혔다고 보도. 미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은 최근 '북한의 미국 화폐 위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 파악하고 있는 대상에 국한해 북한의 달러 위조 규모를 이같이 추정. 북한이 위조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미국 화폐는 100달러짜리 '슈퍼노트'이며 북한이 위폐를 제조했다는 단서는 그 동안 몇 차례 확인됐다고 이 보고서는 밝힘. 보고서는 스탠퍼드대학 시나 체스넛 연구원이 분석한 13건의 사례를 통해 일부는 외교관 여권이 이용되고 대사관 공관원이 개입했다고 주장. 이 밖에 2005년 8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에서 드러난 중국 갱조직 삼합회 활동 가운데 북한에서 제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400만달러의 위폐 유통에 이들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으며 북아일랜드 독립운동 조직인 IRA의 션 갈랜드를 체포했을 때도 북한에서 제조된 위폐 100만달러 이상이 갈랜드와 조직원들을 통해 영국과 동유럽에서 유통된 것으로 의심됐다고 이 신문은 전함. 한국 정보당국이 2005년 4월 적발해 낸 1,400장의 미화 100달러 위폐도 북한에서 제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으며 2006년 1월에는 중국 정부도 북한의 달러 위조에 대해 별도 조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으며 미국의 금융 제재가 취해진 뒤에도 북한이 위조 달러를 제조하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함. 하지만 일단 금융 제재 이후 북한 제조 위폐 유통은 급감했다고 미국 정보당국은 보고 있으며 하지만 초기에 제조된 위폐로 추정되는 슈퍼노트들은 북한과 중국 접경 지역에서 아직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보고서는 위폐 제조는 미국에 의해 보호돼야 할 국가 자산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두 차례의 금융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위폐 제조 책임자 처벌과 장비의 완전 파기를 요구했다고 보고서는 전함. 북한이 이 같은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부족한 외화를 채우는 방법이 따로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추정했으며 북한이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려면 1년에 10억달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고 「매일경제신문」은 밝힘(「매일경제신문」, 2.5).

일 언론, "북, 참치 수출로 외화 획득"

2월 6일 「문화일보」는 6일 「요미우리(讀賣)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로 자금압박을 겪은 지난 1년간 태국에 냉동 가다랑어와 참치 등의 어류를 수출해 26억엔(약 240억원)의 외화를 벌어들였다고 보도.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수산청의 자료를 인용, 이같이 보도하고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 계좌 동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풍부한 수산자원을 이용해 외화획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일본 수산청은 그러나 북한이 세계 참치자원관리단체 등에 소속돼 있지 않고, 북한 근해에서 참치류의 대량 어획도 불가능 한 만큼 "불법조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북한이 태국에 냉동 가다랑어와 참치 등을 수출한 것은 2003년부터지만, 2005년에는 수출량이 974톤으로 극히 적었으며 또한 금융제재로 자금이 동결된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18배가 급증한 약 1만7,400톤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전함. 수출품목은 가다랑어 약 1만4,800톤과 황다랑어 약 2,500톤으로 북한 근해에서는 거의 잡히지 않는 어종이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현재 인도양참치위원회(IOTC) 등 5개의 국제기관이 해양상의 모든 참치와 가다랑어 조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나라들은 조업을 할 경우 위원회측에 어선을 등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이 신문은 전하면서 북한은 어느 기관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만큼 제3국의 어선을 이용해 조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요미우리신문」은 전망했다고 「문화일보」는 덧붙임(「문화일보」, 2.6).

러, "북 채무 90% 탕감"

2월 13일 「조선일보」는 러시아가 80억달러(7조4,000억원)에 이르는 북한의 대(對)러시아 채무 중 90% 이상을 탕감해 준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12일 밝혔다고 보도. 이런 방침은 작년 12월 17~22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협상에서 '원칙적으로 80% 이상 탕감'으로 의견을 모았던 것보다 더 진전된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임. 관계자에 따르면, 북핵 6자회담 러시아측 수석대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Losyukov) 외교차관은 지난 1일 모스크바를 방문해 회담한 천영우(千英宇) 6자회담 한국측 대표에게 채무 90% 이상 탕감 방침을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러시아측은 "이미 북한측과 양해가 이뤄졌으며, 이는 북한의 핵동결과 나머지

참가국들의 대북 에너지지원을 일차 목표로 한 6자회담이 난관에 부딪힐 때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는 전함. 러시아가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의 대북 채무 탕감을 해준 데는 6자회담의 결과로 대북 에너지지원을 하게 될 경우 부담을 줄이거나 부담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다고 「조선일보」는 전함(「조선일보」, 2.13).

WHO, "한국정부 지원으로 북한 의료체제 크게 개선"

2월 21일 「노컷뉴스」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 정부로부터 미화 2천만달러 규모의 의료 지원을 받아 북한의 의료시설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보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위기대응국의 한 고위 관리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미화 2천만달러 규모의 대북 의료지원 사업은 지난해부터 2년 계획으로, 전체 예산의 78%는 북한 전역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공급하고 10% 정도는 북한의 의료 인력을 교육하는데 사용된다"고 밝힘. 세계보건기구가 진행하고 있는 대북 의료지원 사업은 구체적으로 60개의 도 병원과 1,200개의 리 병원에 의료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응급환자를 긴급 수송하는 앰뷸런스와 의사를 위한 3,000여개의 의료 가방, 그리고 30개 지역의 병원에 응급실과 산모병동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컷뉴스」는 전함. 세계보건기구 고위 관리는 "지난해 3월 28일에 시작이 된 이후 1년간 지속해온 이 대북 의료지원 사업은 고 이종욱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잠정적으로 5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하고 "이 의료 지원 사업으로 북한 전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기본적인 진료 등의 여러 가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 전염병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노컷뉴스」는 전함(「노컷뉴스」, 2.21).

UNICEF, 북한 홍역예방 백신 제공 운동 실시

2월 22일 「노컷뉴스」는 유엔아동기금 유니세프(UNICEF)가 북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홍역예방을 위한 대대적인 홍역 백신 제공 운동을 펴기로 했다고 보도. 유니세프의 데미안 페르소나즈 대변인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홍역 백신 5백만 회분을 요청해 왔다고 밝히고 유니세프와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다른 협력기구들은 이번 면역운동을 위해 170만달러를 조달해야 한다"고 밝힘. 페르소나즈 대변인은 "북한 보건부는 이 같은 사실을 불과 이틀 전에 확인했다"고 지적하고 "유니세프가 홍역 확산을 방지할 백신과 주사기 등, 필요한 물품들을 마련

하는데는 적어도 열흘이 걸려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러한 물품들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홍역 면역 운동에 착수할 수 없다"고 밝힘. 그는 "유니세프는 벌써 많은 북한 어린이들은 너무 늦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다소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 당국이 좀 더 일찍 홍역 발병 문제에 관해 알려줬어야 했다"고 밝혔다고 「노컷뉴스」는 전함.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2005년에 대부분이 어린이인 34만 5천명의 북한 주민들이 홍역 탓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올 들어 3천여명이 발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노컷뉴스」는 덧붙임(노컷뉴스」, 2.22).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개성공단 누적생산 1억달러 돌파

2월 2일 「국민일보」는 개성공단이 첫 제품을 생산한 지 2년여 만에 누적생산액 1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보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2일 "지난 1월 1,200만달러어치를 생산하면서 개성공단 누적생산액이 총 1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힘.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주방기기 업체인 리빙아트(소노코쿠진웨어 전신)가 첫 시제품을 생산한 후 2005년 1,500만달러, 2006년 7,400만달러를 생산해 지난해 말까지 총 8,900만달러를 기록했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개성공단에는 현재 21개 기업이 가동중이며, 지난해 생산은 2005년에 비해 5배 증가했으며 또 지난해 12월 생산액은 약 1,000만달러로 2005년 동기 대비 3배 증가하는 등 입주기업 생산액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신문은 전함. 이와 관련하여 개성공단 관계자는 "가동기업 수 자체가 늘고 입주기업 생산도 숙련도가 높아지면서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으며 특히 북측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철야 근무까지 자청하고 있는 것도 생산액 증가에 한몫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 1만1,000여명 가운데 5,000명 이상이 잔업에 나서고 있고, 500명 이상이 3교대로 철야근무까지 하며 생산액을 높이고 있다는 게 개성공단측 설명이라고 이 신문은 전함. 개성공업지구관리위는 북측 근로자들의 잔업과 야근을 위해 통근버스 50여대를 동원, 출퇴근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국민일보」는 덧붙임.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초창기 개성 시내에서 5~10㎞를 걸어 파김치가 돼 출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통근버스를 도입했는데 이제는 끝나는 시간에 관계없이 잔업과 야근 후에도 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국민일보」, 2.2).

대통령, 6자회담 관련 '남는 장사'

2월 16일 「한국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이 6자회담 2·13 초기조치 합의와 관련, "우리가 (북한에) 다 주더라도, 다 부담하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라고 밝혔다고 보도. 노 대통령은 15일 오후(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북한이 마지막에 중유를 요구해 우리가 다 뒤집어 쓰고 올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는데 다행히 균등분할한다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힘. 노 대통령은 또 "(북한에) 자꾸만 퍼준다고 비난을 많이 듣는데 미국이 전후(戰後)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게 마셜 플랜"이라며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유럽 경제를 살렸기 때문에 그 이득을 가장 많이 본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도 북한경제를 살려가면 마샬플랜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이와 관련,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15일 "6자 참가국이 자기들 혈세를 내놓고 공동 참여해야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신경 쓰게 되고 북한도 합의이행에 더 큰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균등분담 원칙을 밀어붙였다"고 설명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한국일보」, 2.16).

정부 고위당국자, "쌀·비료 한꺼번에 줄 수 없다"

2월 22일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22일 대북 인도적지원 재개와 관련, "인도적 지원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쌀과 비료를 한꺼번에 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이 당국자는 이날 언론사 편집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대북지원이) 2.13합의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2.13합의에 적시된) '행동 대 행동' 진행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북지원을 고려하겠다"고 밝힘. 그는 이어 "6자회담의 진전상황을 염두에 두고 남북대화와 국민의 이해를 고려해 지원문제를 물의없이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볼 때 지원하더라도 단계적, 순차적으로 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 당국자는 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북지원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임. 또한 이 당국자는 오는 27일 평양에서 시작되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전망에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좋을 듯하다"면서 "무거운 주제보다 우호관계를 회복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힘. 장관급회담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현재로는 그럴 계획이 없다. 정상 간에 판단할 문제인 만큼 이번에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정상회담의 시나리오를 갖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는 "청와대가 만들 일"이라고 답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 당국자는 이번 장관급회

담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면담 요청도 하지 않았다”며 “장관급회담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22).

정부, 대북 중유지원 준비 착수

2월 26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북핵 ‘2.13 합의’에 따라 중유 5만톤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도. 양창석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의 합의에 따라 북측에 중유 5만톤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며 “오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힘. 정부는 또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면 협의를 통해 중유 5만톤 지원에 드는 비용을 남북협력기금의 예비비에서 지출키로 결정되었으며 이런 방침은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양 대변인은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5만톤 지원에 드는 비용은 중유에 함유된 유황 비율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대략 수송비를 합쳐 2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양 대변인은 “톤당 350달러 내외로 보며 거기에 운송비 등 부대경비가 20% 정도 들 것”이라고 설명.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면 중유 5만톤을 지원해야 하는데 시기를 고려해 지금쯤은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조달청에 의뢰해 국내 정유사를 선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양 대변인은 “구체적 사항들은 2.13 합의 이후 한 달 이내에 열리게 돼 있는 경제·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임. 앞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는 2.13합의에서 북한이 60일 이내에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는 등 초기단계 조치를 취하면 나머지 참가국들이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에너지 지원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2.26).

5. 북한·주변국가 관계

북미, BDA 실무회의 종료

2월 1일 「연합뉴스」는 북한과 미국이 1월 31일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북한계좌 동결문제 해결을 위한 제2차 금융실무회의에서 별다른 합의 없이 이틀 만에 회의를 마쳤다고 보도. BDA 실무회의 미국대표단 단장인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베이징(北京) 숙소인 세인트레기스호텔(國際

俱樂部飯店)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힘.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북한대사관에서 하루 종일 회의를 했으며 오늘로 회의는 끝났지만 더 많은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으나 차기 회의 일정은 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임. 그러나 그는 "북한측으로부터 아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앞으로 회의가 진전을 이뤄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번 회의는 아주 생산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 그는 "30만쪽 분량의 문서를 바탕으로 북한의 돈세탁 혐의를 장기간 조사한 것이 현재 진전을 시작했으며 일부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지점에 있다"면서 돈세탁 우려가 정당했음을 입증했다고 밝힘.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내가 이미 얘기했듯이 오늘 회의의 초점은 (돈세탁과 위조지폐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에서 진행된 불법행위에 관한 것 이었다"고 설명. 그는 "우리는 방코델타아시아가 동결한 50개 계좌 소유주들에 대한 정보를 조목조목 점검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했으며 북한측에 사전 제기한 의문점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1).

「조선신보」, "BDA문제, 미 국무부-재무부 입장 달라"

2월 2일 「조선신보」는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에 대해 미국의 국무부와 재무부 사이에 입장이 다르다고 보도. 이 신문은 금융제재 문제에 대한 연원을 정리한 기사에서 "미 정부 내에서도 법집행을 강조하는 재무성과 외교적 측면을 중시하는 국무부 사이에서 문제해결과 관련한 견해의 상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조선신보」는 지난달 31일 끝난 BDA 실무회담을 6자회담을 앞둔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하면서 "미국은 현재까지 제재의 근거가 되는 조선(북)의 불법행위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는 제재조치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이 신문은 "미국이 9.19 공동성명 발표와 때를 같이해 제재조치를 발동시킨 배경에는 '금융제재의 책정자'로 지목되는 데이비드 애셔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이 작성한 '북조선의 국제적 불법행위' 관련자료가 있다"며 "그는 2001년 부시 정권의 발족 직후에 등용돼 2005년 6월까지 국무부, 재무부,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이 망라된 '북조선범죄대책반'을 주도해온 인물"이라고 강조. 「조선신보」는 "애셔 자문관은 그해 7월에 국무부를 퇴직한 후 관련자료를 정권내의 신보수주의세력(네오콘)에 제공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9.19 공동성명을 어떻게든 백지화하고 싶었던 강경파들이 이를 조선에 압력을 가하는 절호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구도가 부각된다"고 밝힘. 이어서 「조선신보」는 "금융제재의 해제를 둘러싼 조미간의 대립은 6자회담의 진전에도 직결되는 사안이고 조선반도 정세의 행방을 좌우하는 초미의 문제"라며 "조선측은 금융제재를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집중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BDA구좌의 동결해제를 6자회담 진전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해 왔다"고 밝힘. 이 신문은 "미국은 종전까지 사법상 문제인 금융제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면서 조미 직접대화를 완강하게 거부해 왔지만 조선의 핵시험과 미 중간선거 이후 강경태도를 점차 완화시키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며 북한과 대화입장을 강조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발언과 BDA 동결계좌 중 합법계좌를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는 「로이터통신」의 보도내용을 소개(「조선신보」, 「연합뉴스」, 2.2).

일, 북핵 회담 진전 있어도 지원 안할 것

2월 3일 「연합뉴스」는 「교도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일본 정부가 8일로 예정된 차기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가동 중지 등 핵포기를 위한 일정한 진전이 있더라도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양국간 국교 정상화 문제 등을 다룰 워킹그룹이 설치되더라도 핵문제 이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일본인 납치문제의 진전이 보장 되지 않는 한 지원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함. 이 통신은 이어 한국 등이 핵문제의 진전에 대한 대가로 대북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일본의 이 같은 대응이 자칫 다른 참가국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비판을 살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3).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북과 중유제공 협의한 적 없어"

2월 4일 「연합뉴스」는 미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4일 "대북 중유제공에 대해 (북한과)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 힐 차관보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千英宇)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찬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한 뒤 "그러나 9.19 공동성명에 보면 에너지 및 경제지원 관련 조문이 있다"고 지적, 북측이 회담에서 이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힐 차관보는 중유제공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질문받자 "(차기 회담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요소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 "9.19 공동성명 이행의 좋은 출발을 하는 것이 차기 회담의 목표"라고 밝힘. 그는 일본 측이 차기 회담에서 제기할 것으로 보이는 자국민 납치 문제에 언급, "일본인들에게 납치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며 북한과 일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이날 회동 내용과 관련, 힐 차관보와 함께 기자들을 만난 천 본부장은 "차기 회담 전략에 대

해 한미간 마지막으로 조율을 했다"면서 "한미간에 차기 회담 전략에 대해 완벽한 의견일치를 보았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밝힘(「연합뉴스」, 2.4).

일 언론, "북, 중유 50만톤 요구"

2월 4일 「경향신문」은 4일 「아사히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북한이 영변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1994년 북미 양국이 합의했던 연간 50만톤 이상의 중유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경수로 원전이 완성될 때까지는 완전한 핵포기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보도. 「아사히신문」은 북한측 초청으로 지난달 30일부터 5일간 북한을 방문해 김계관 외무성 부상, 이근 북미국장 등과 만난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과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위트 전담당관과 올브라이트 소장에 따르면 김 부상 등은 오는 8일 재개될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초기단계 조치로 북한이 영변 핵관련 시설을 동결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의 복귀와 감시카메라의 재가동에 응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함. 그러나 김 부상 등은 사찰관에 의한 원자로의 조사나 사용이 끝난 핵연료봉 재처리 시설에 대한 접근은 인정하지 않으며, 핵실험장의 접근이나 폐쇄, 공표되지 않은 핵개발 계획 신고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 북한은 핵시설 동결의 반대급부로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 외에 테러지원국가 지정 해제 등 미국의 '모든 제재 조치'의 해제 노력을 요구했다고 「경향신문」은 덧붙임. 동시에 경수로형 원전이 완성되기 전의 핵포기에는 응하지 않으며, 완성때까지의 대체에너지로 연간 50만톤이 넘는 중유나 그에 상응하는 전력의 공급을 요구했다고 두 사람은 전함. 「아사히신문」은 북한의 이번 요구는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 한편 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차기 6자회담에서 핵폐기 초기 조치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중유 또는 대체 에너지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보도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경향신문」, 2.4).

미, 북한 민주화 지원비 200만달러 첫 책정

2월 6일 「세계일보」는 미국 국무부가 5일 2008 회계연도 예산안에 북한 민주화를 지원하기 위한 '경제지원기금(ESF)'을 정규 예산안에선 처음으로 200만달러를 책정했으며 이란에 대해선 7,500만달러를 배정했다고 보도. ESF는 경제·정치·안보상 여건을 감안해 개발도상국 등을 돕기 위해 책정한 자금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번 예

산안에 ESF와 관련해 총 33억2,000만달러를 의회에 요청했다고 이 신문은 전함. 북한과 이란의 경우 ESF 자금은 민주화 운동 단체 및 기구에 지원되며 국무부는 또 미국의 소리(VOA)와 자유아시아라디오(RFA)의 대북 방송을 하루 10시간으로 늘리고, RFA는 단파 외에 중파 방송이 추가되면서 대외방송 지원비로 6억6,800만달러를 배정했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국무부는 이 밖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과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탈북자 보호 등 이민·난민 지원비로 지난해와 비슷한 2,000만달러를 배정했으며 국방부도 북한과 이란으로부터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과 관련해 육·해상 MD 체제 개선 등의 자금으로 89억달러를 요청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함.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2조9,000억달러 규모의 2008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작되는 2008 회계연도의 미 정부 예산은 올해보다 4.2% 늘어난 액수라고 이 신문은 밝힘(「세계일보」, 2.6).

마카오, 대북 금수조치

2월 6일 「연합뉴스」는 북한의 물자조달 창구이자 불법자금 통로 역할을 해오던 마카오가 유엔의 대북제재 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고 보도. 마카오 정부는 지난달 10일 '행정장관 지시'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따라 마카오를 통한 사치품과 군사장비의 대북 수출과 환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 시행중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금수품목에는 전투기, 공격용 헬기, 군함, 탱크, 장갑차, 대포 등 군사무기와 원자재, 부품 뿐 아니라 핵, 미사일 관련 물질과 설비, 기술도 포함되며 이런 장비를 유지, 보수, 제조하는 기술과 자문, 서비스도 마찬가지라고 「연합뉴스」는 전함. 또한 마카오항을 경유하는 것 뿐 아니라 마카오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수출, 재수출, 환적, 반출하는 것도 전면 금지되며 북한산 군사장비가 마카오를 거쳐 교역되는 것 또한 금지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마카오 정부는 외교 및 국방 사안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는 중국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이런 규정을 마련했으나 '사치품'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마카오는 북한의 조광무역과 자회사들이 각종 물자와 사치품, 무기 원료를 조달하고 불법 자금을 거래해오던 곳으로 최근 북한 기업인들이 대거 마카오에서 철수한 것도 이번 조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마카오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거액의 자금을 처리하는 은행, 카지노 등은 돈세탁 관련 흔적이나 테러 지원용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발견할 경우 당국에 신고토록 한 '돈세탁 방지 및 테러지원 범죄 예방조치'를 시행중이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한편 마카오와 인접한 홍콩은 아직 구체적인 대북제재 조치는 시행치 않고 있는 것

으로 알려졌으나 기존 관세법 규정에 따라 홍콩 영해내에 핵물질 등 대량살상무기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6).

미 국무부, "2008년초까지 북핵 협상 완료"

2월 6일 「연합뉴스」는 미 국무부가 2008년 초까지 북핵 협상을 마무리하고 북한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해체 시작 및 검증체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 국무부는 5일 공개한 2008 회계연도 업무계획 보고서에서 또 2008년엔 북한의 모든 중장거리 미사일의 해체를 위한 대북 미사일 협상의 개시도 목표로 제시. 이 업무계획은 "올해 내내 대북 핵협상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해 2008년초 협상 타결을 목표로 제시하는 한편 화학무기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AG)을 통해 "지속적으로 북한의 화학무기 거래를 감시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힘. 북한의 생물무기 문제에 대해선 북한의 생물무기 협약 준수를 계속 압박해나가면서 이를 위한 전략을 보강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밝힘. 국무부는 특히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1등급 대상인 탄두 중량 500kg 이상, 사정 300km 이상의 미사일과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가능한 제한과 수출 금지" 협상도 2008년에 시작하겠다고 밝힘. 국무부는 탈북자들의 미국 수용 정책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탈북자들의 인도주의적 필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미 정부간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계가 긴요함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6).

미 국무부 차관보, "미 재무부 BDA 조사 종결원해"

2월 6일 「조선일보」는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5일 "미국 재무부에서는 (북한 계좌가 동결돼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 조사를 종결하길 원하고 있다"며 "어떤 결론이 날지 두고 보자"고 말했다고 보도. 힐 차관보는 이날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폐기 논의 개시의 전제 조건 차원에서 해결을 요구해온 BDA 문제에 언급, "미국을 떠나기 전 (미·북 BDA 협의 수석대표인) 대니얼 글레이저 재무부 부차관보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그는 또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베이징에서 가진 북한 대표단과의 협의가 유용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밝힘. 힐 차관보는 오는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작되는 6자회담과 관련, "나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때는 기대 수준이 매우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려하게 된다"며 "협상에 임하는 사람에게 높은 기대 수준은 그리 반갑지 않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조선일보」, 2.6).

미, 북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2월 7일 「머니투데이」는 7일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를 인용하여 8일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재개되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이라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리스트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 신문은 또 북한이 핵을 폐기하기 위한 발전된 노력을 보여준다면 미 정부가 미국 기업들과 북한간 거래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함. 미국은 매년 '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불량국가)'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북한은 지난 1987년 11월 대한항공 항공기 폭파사건으로 이듬해 1월 리스트에 올랐다고 「머니투데이」는 덧붙임(「머니투데이」, 2.7).

일, 북 원자로 가동중단 및 사찰수용 요구

2월 8일 「연합뉴스」는 북핵 6자회담 일본측 수석대표인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郎)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8일 개막한 제5차 3단계 회의에서 북한에 핵포기를 향한 첫 조치로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국제사찰을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 일본 대표단이 공개한 성명에 따르면 사사에 국장은 개막 성명을 통해 이처럼 요구하고 "이런 초기 조치는 상당히 짧은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임.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이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뒤 핵포기를 위한 "초기단계 조치"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2.8).

미, 중국에 대북 금융제재 일부 해제 용의 통보

2월 8일 「뉴시스」는 7일 「이타르타스통신」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 정부가 차기 6자회담 개막에 앞서 중국에 대북 금융제재를 일부 해제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 통신은 중국 정부에 가까운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중국과 2국간 협의를 갖는 자리에서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8일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전함. 하지만 소식통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 '일부 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힘. 이에 대해 「이타르타스통신」은 마카오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계좌의 예금 2,400만 달러 가운데 50%의 동결 해제, 북한 관련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지 않는

다는 등이 그 내용으로 될 가능성을 지적했다고 「뉴시스」는 전함.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중유 공급을 조건으로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제안한데 대해 중국과 미국, 한국이 대북 경제지원에 동의할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이들 국가는 북한에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용의도 있는 것으로 소식통은 밝혔다고 「뉴시스」는 덧붙임 (「뉴시스」, 2.8).

6자회담 개막, 이행 및 상응조치 관련 의견 교환

2월 9일 「국민일보」는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개막일인 8일 핵 폐기를 위한 초기단계 이행조치와 상응조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참가국들은 특히 영변 5㎿ 원자로 등 5개 핵 관련 시설의 가동 중단과 폐쇄 및 봉인 조치를 2~3개월 내에 이행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체에너지 등을 같은 기간 내 제공한다는데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은 이날 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문 초안을 작성, 참가국들에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일보」는 전함.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참가국들간에 조속한 시일 내 비핵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며 "특히 (참가국들은) 지난달 베를린에서 열린 미·북 협의가 회담 재개와 초기단계 조치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힘.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오늘 진정한 진전을 만들어냈다"면서 "우리는 핵 시설 동결에 관심이 없다. 우리가 관심 있는 바는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을 다루는 것이며, 핵 폐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밝힘. 북한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전체회의 및 수석대표 회의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초기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이행 의지를 밝혔으며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측은 이번에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와 희망을 피력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국민일보」, 2.8).

미 국무부, "북핵 해결은 다단계 절차"

2월 9일 「연합뉴스」는 미 국무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이 '다단계 절차(a multi-step process)'가 될 것이라고 8일 거듭 밝혔다고 보도.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북핵 6자회담은 2~3일 걸리는 게 보통이지만 진전 상황에 따라 기간이 길어지거나 짧아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힘. 케이시 부대변인은 6자회담의 성공 여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한 9.19 공동성명의 이행 여

부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며 "모든걸 한꺼번에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으며, 이것은 다단계 절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그는 이어 북핵 문제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서는 구두 약속이나 성명 같은 것 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 그는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북한측 김계관 외무성 부상간에 베를린 회담에서 각서가 오갔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하고 힐차관보와 김 부상은 베를린회담에서 협상이 아니라 유익한 협의를 했을 뿐이며 "서로 나누거나 합의한 문서는 전혀 없다"고 그는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9).

「조선신보」, "미, 되돌릴 수 없는 적대정책 포기해야"

2월 9일 「연합뉴스」는 9일 「조선신보」 보도에서 초기이행조치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미국의 되돌릴 수 없는 대북적대정책의 포기를 강조했다고 보도. 이 신문은 '초기단계조치, 결단과 결단의 홍정' 제목의 베이징발 기사에서 "조선(북)은 미국의 적대시정책포기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되는 초기단계조치가 취해져야 상응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상황 변화에 따라 철회될 수도 있는 임시적인 조치라면 조선도 그에 대응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 신문은 미국의 되돌릴 수 없는 대북적대정책 포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조선신보」는 "현시점에서 핵시설 가동중지는 폐기를 전제로 하는 것만큼 미국은 조선측이 그것을 마음 놓고 시작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구비해야 할 것"이라며 핵폐기를 전제로 한 초기이행조치 이행입장을 확인하면서 "미국이 준비한 초기단계조치가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관여정책(포용정책)에 기초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조선은 주저 없이 비핵화 공약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힘. 신문은 "구체적인 행동단계에 필요한 것은 조미 쌍방의 결단과 결단의 홍정"이라며 "제3단계 회담의 성패는 결국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조선과의 직접대화를 하게 된 미국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한 첫발을 어디까지 디디려 하는가에 달렸다"고 강조. 이 신문은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조선은 자기의 비핵화공약을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이행할 결단을 이미 내렸고 그를 위한 준비도 되어있다"며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철회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조선측도 비핵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는데 인색하지 않겠지만 단계별로 양자의 보폭은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주장.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에서 대체에너지 제공 등 상응조치가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 "조선은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실시하는 미국의 정책에 관심이 있다"며 "조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조미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보장돼 한 개의

핵무기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 신문은 "이번 회담은 베를린에서 진행된 조미회담에서 이룩된 일정한 합의에 토대해 열렸다"며 "조선측은 베를린 회담에서의 합의에 토대해 9.19공동성명 이행의 초기단계조치를 토의하는 이번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베를린 북미회담에서의 '합의'를 여러차례에 거쳐 지적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9).

일 언론, "미, 조만간 대북 금융제재 일부 해제"

2월 9일 「경향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9일자 「니혼게이자신문」 보도를 인용하여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일부를 해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보도. 신문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해제시기에 대해 "그렇게 멀지않은 시기"라며 핵시설 동결 등 북한의 태도를 주시해 최종판단할 것임을 시사. 베이징에서 재개된 6자회담에 북한이 복귀한 배경에는 이 같은 금융제재를 둘러싼 북미간 합의가 깔려있다고 신문은 전함. 이 같은 사실은 미국이 북한과 가진 금융전문가회의 개요를 설명하는 가운데 일본측에 전달한 것으로, 미국은 대북 금융제재 해제 전에 일본 측에 통고할 의향을 내비쳤다고 「니혼게이자신문」은 덧붙임. 이와 함께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자문관은 이날 "미 재무부가 이미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관련 조사를 끝내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이며, 마카오 금융당국도 이미 일부 북한의 합법적 계좌를 푼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 애셔 전 자문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미국이 BDA에 있는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별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힘. 그는 그러나 "지금 부시 행정부가 한반도 안정을 이유로 마카오 은행에 대한 제재를 풀려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여전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고 우리는 북한을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범죄국가로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 애셔 전 자문관은 비록 BDA은행의 북한 자금 중 일부가 해제되더라도 북한은 앞으로도 국제 금융계에서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이 신문은 전함(「경향신문」, 2.9).

「조선신보」, "핵폐기에 상응하는 에너지 담보조치 취해야"

2월 12일 「조선신보」는 영변의 핵시설은 북한의 핵동력 공업체계의 일환인 만큼 폐기를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담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도. 이 신문은 "영변 핵시설은 조선(북)의 자립적인 핵동력 공업체계의 일환"이라며 "그것을 폐

기하라고 한다면 상응한 에너지를 담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 규모는 지원을 하는 측이 현실에 부합되게 계산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혀 현재 6자회담이 에너지 지원규모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북측 입장의 당위성을 강조. 「조선신보」는 "조선은 과거에 조선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조선측이 불합리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과거 손실까지 보상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이 신문은 "9.19 공동성명의 이행문제가 토의되게 됐지만 앞으로 각측의 행동이 시작돼도 경수로 문제는 하루 이틀 사이에 풀리지는 않는다"며 "일반적인 상식에 기초하더라도 조선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논의하자면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 신문은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현 단계에서 제반 사실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문제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응을 강구하는 것은 무엇보다 미국의 몫"이라며 "6자회담에 참가하는 각측이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에도 미국은 지원계획의 작성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조선신보」는 "비핵화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자면 미국도 대화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며 "조선이 수 십년간에 걸쳐 발전시켜온 핵동력 공업체계를 변경시키는데 필요한 지원의 규모를 에누리 없이 산출하는 것도 조미 신뢰조성의 중요한 고리"라고 밝힘. 이 신문은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는 각측이 이 문제(에너지 제공문제)에서 타결점을 찾자면 조선반도의 비핵화 실현, 조선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지향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지원의 성격을 바로 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참가국들의 결단을 촉구. 아울러 신문은 "외신들은 조선에 대한 지원을 양적인 측면에서만 취급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보도를 되풀이 하고 있다"며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납치문제를 빌미로 조선에 대한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일본의 언론"이라고 밝힘(「조선신보」, 「연합뉴스」, 2.12).

미 국무부 차관보, "30일내 BDA 제재 해결, 6자에 통보"

2월 13일 「연합뉴스」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13일 "우리는 방코델타아시아(BDA)와 관련된 (대북)금융제재 문제를 30일 내에 해결할 것이며, 이를 중국 등 6자회담 참가국에게 오늘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보도. 힐 차관보는 이날 제5차 6자회담 3단계 회의 폐막 후 숙소인 베이징(北京) 세인트 레지스 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한 뒤 "우리는 몇가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토론을 했다"고 밝힘. 그는 이어 "미 행정부 내 고위급 인사들 간에 그 문제에 대한 많은 협의가 있었다"고 소개했지만 "6자회담 협상가인 나로서는 '30일 내 BDA제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을 뿐"이라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연합뉴스」는 전함. 힐 차관보는 또 북한이 이번 회담기간 고농축우라늄(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했느냐는 질문에 "시인하지 않았다"고 전한 뒤 북한 핵프로그램 의혹 규명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의 역할을 강조. 그는 특히 "북한이 초기 단계에서는 폐기할 핵 프로그램의 목록에 대해 (참가국들과) 논의한 뒤 다음 단계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를 해야한다"면서 "우리는 목록 논의 단계에서 북한이 무엇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인식해 정확한 신고를 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13).

2 · 13 북핵 합의 관련 각국 반응

2월 14일 「문화일보」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 회담 관련국가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문 채택과 관련, "북한이 핵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걸음을 내딛었다"며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시했다며 각국의 반응을 보도. 일본 정부는 13일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한 북한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3일 6자회담의 성과를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6자 회담이 만든 틀 내에서 납치 문제도 확실하게 포함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도 이날 "성과가 컸다"고 평가하면서 북일관계 정상화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구성에 대해 "국교정상화는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 있다. 일단 북한과 대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말해 이 실무그룹에서 납치문제를 주요 의제로 하겠다는 뜻을 내 비쳤다고 「문화일보」는 전함. 이번 6자회담의 주최국이었던 중국 역시 이번 회담의 결과에 큰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고 「문화일보」는 전함.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국무위원은 6자회담 폐막 직후 "이번 회담이 '중대한 돌파구'였다"면서 "이번 6자회담이 그 자체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디뎠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동북아지역의 항구적인 안전 추구와 평화·안정 유지에 명실상부한 중요토론의 장이 될 것임을 충분히 입증했다"고 강조. 탕 국무위원은 이번 회담의 결과를 즉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당총서기 겸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보고했으며 후 주석과 원 총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담당자들의 노력을 치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문화일보」는 전함. 러시아 외무부도 13일 6자회담 폐막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이번 회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실행하는 일환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우선적인 조치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이라고 평하면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하도록 했다는 점이 이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함.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의 크리스티나 갈라크 대

변인은 “6자회담 합의에 고무됐다”고 말했으며 EU 의장국인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핵시설을 폐쇄하고 모든 핵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 합의가 조건없이 포괄적으로 이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영국,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국들도 “북핵 문제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단계가 더욱 중요하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 신문은 전함.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은 13일 “IAEA는 북한에 다시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북한의 모든 핵시설이 평화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유엔은 북핵 문제의 타결에 환영하지만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문화일보」는 전함. 미국의 알레한드로 울프 유엔 주재 대리대사는 13일 “지난해 10월 이뤄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설명하고 “이번 합의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들이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문화일보」는 전함(「문화일보」, 2.14).

미 대통령, “북 2 · 13 합의 이행하면 식량지원 재개”

2월 15일 「경향신문」은 부시 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2·13 북핵 합의’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좋은 진전이자 첫 발걸음”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북핵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북핵 폐기의 올바른 방향으로(right direction) 가고 있다”며 “미국은 물론 북한의 ‘이웃국가들’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독특한(unique) 것”이라고 밝힘. 부시 대통령은 특히 2·13 북핵 합의가 잘못됐으니 뒤엎으라는 존 볼턴 전 유엔대사의 비판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것(flat wrong)”이라고 반박. 이어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때 에너지·식량 등의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식량 지원에 “특별히 관심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경향신문」, 2.15).

외교통상부, 6자회담 합의문 공개

2월 15일 외교통상부는 2월 13일 합의된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 합의 결과를 발표. 다음은 외교통상부가 밝힌 비공식 번역문임(외교통상부, 2.15).

< 합의문 전문(비공식 번역)>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최종)

2007.2.13

제5차 6자회담 3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2월 8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Ⅰ.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초기단계에서 각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의를 하였다. 참가국들은 한반도 비핵화를 조기에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와 의지를 재확인하였으며,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Ⅱ.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병렬적으로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있는, 사용후 연료봉으로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간 현안을 해결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미합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 나간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와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 정상화를 취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양자대화를 개시한다.

5. 참가국들은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의 1조와 3조를 상기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에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참가국들은 초기단계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긴급 에너지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중유 5만톤 상당의 긴급 에너지 지원의 최초 운송은 60일 이내에 개시된다. 참가국들은 상기 초기 조치들이 향후 60일 이내에 이행되며, 이러한 목표를 향하여 상호 조율된 조치를 취한다는데 합의하였다.

< 합의문 전문(비공식 번역)>

Ⅲ. 참가국들은 초기조치를 이행하고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실무그룹(W/G)을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1. 한반도 비핵화
2. 미·북 관계정상화
3. 일·북 관계정상화
4. 경제 및 에너지 협력
5.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실무그룹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수립한다. 실무그룹들은 각각의 작업진전에 관해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보고한다. 원칙적으로 한 실무그룹의 진전은 다른 실무그룹의 진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5개 실무그룹에서 만들어진 계획은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이행될 것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실무그룹 회의를 향후 30일이내에 개최하는데 합의하였다.

Ⅳ. 초기조치 기간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와 흑연감속로 및 재처리 시설을 포함하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의 불능화를 포함하는 다음단계 기간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최초 선적분인 중유 5만톤 상당의 지원을 포함한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이 제공된다.

상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 협력 실무그룹의 협의와 적절한 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Ⅴ. 초기조치가 이행되는 대로 6자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확인하고 동북아 안보협력 증진방안 모색을 위한 장관급 회담을 신속하게 개최한다.

Ⅵ. 참가국들은 상호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동북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을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갖는다.

Ⅶ. 참가국들은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하고 다음단계 행동에 관한 협의를 위해 제6차 6자회담을 2007년 3월 19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북,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 준비"

2월 15일 「연합뉴스」는 북한이 '2.13 합의사항'을 준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북한의 북핵 6자회담 협상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밝혔다고 보도. 6자회담을 마치고 이날 베이징을 떠난 김 부상은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 영접차 나온 발레리 수히닌 러시아 대사(전 주한 러시아 부대사)와 관화빙(關華兵) 중국 대사관 공사참사에게 "(6자간) 대화는 잘 진행됐다. 우리는 대화 결과를 이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15).

미 대통령, "북 핵폐기 약속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2월 16일 「뉴시스」는 부시 미국 대통령이 후진타오 중국 주석에게 북한은 핵프로그램 폐기 약속에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15일 고든 존드로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전화를 걸고 "북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도출해 낸 2.13합의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부끄럽지 않게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는 것.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결의 1718조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고 「뉴시스」는 전함. 부시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2.13합의 도출에 열쇠 역할을 한 점에 대해 사의(謝意)를 표시하기도 했다고 「뉴시스」는 전함(「뉴시스, 2.16).

국정원, "북, HEU 프로그램 있다"

2월 20일 「경향신문」은 국가정보원이 20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프로그램과 관련, "(북핵 2·13합의는) '9·19 공동성명'을 재확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HEU 문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향후 워킹그룹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이 같은 언급은 현재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존재를 부인해온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사실상 확인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고 이 신문은 덧붙임.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2·13합의에 HEU가 포함됐느냐'는 정보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점차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현존 핵프로그램에 HEU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 참석자는 전함. 이 참석자는 "단정적으로 있다, 없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확인해준 것"이라고 설명. 다른 정보위원도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고, 핵폐기 논의 대상에 모두 포함된 것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함(「경향신문」, 2.20).

미 국무장관, "북한 HEU 문제 철저히 추궁할 것"

2월 22일 「세계일보」는 북한이 2·13 북핵 합의에 앞서 미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21일 밝혔다고 보도. 라이스 장관은 이날 독일에서 가진 「CNN」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과 시리아와는 대화를 거부하면서 북한에는 왜 포용정책을 펴느냐는 질문에 "상황이 매우 다르다"며 "북한은 신호를 보내왔고 앞으로 나아갈 자세가 돼 있다는 것을 훨씬 잘 보여줬다"고 강조. 라이스 장관은 이어 "우리는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할지 메시지를 보냈고,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힘.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 13일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13 합의에 따라 설치되는 비핵화 실무그룹에선 초기 이행 조치 60일 사이에 고농축우라늄(HEU)을 포함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전모를 파악하는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힘. 힐 차관보는 "이 첫 단계, 즉 앞으로 60일 사이에 북핵 프로그램 목록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HEU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철저히 추궁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초기 이행 조치 단계에서 북핵 프로그램의 전모에 대해 논의한 후 다음 단계에서는 이를 정확하게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고 「세계일보」는 전함(「세계일보」, 2.22).

정부 고위당국자, "HEU, 북핵 협상 걸림돌 안돼"

2월 23일 「연합뉴스」는 정부 고위당국자가 23일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문제가 북핵폐기 과정에서 협상의 결렬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는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해 "2.13 합의가 있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HEU와 관련된 문제를 포함한 북핵의 모든 것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포함되어 있고, 2.13 합의가 HEU 문제에 대해 소홀하다든지, HEU가 북핵협상에 걸림돌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덧붙임. 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방북 가능성과 관련, 당국자는 "북미관계 정상화 워킹그룹 1차 회의가 내달초께 개최되면 미국에서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차기 회의는 미국이 아닌데서도 할 수 있다"며 "답방으로서 방북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고, 힐 차관보 입장에서는 그런 의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힘. 한일정상회담의 재개 전망에 대해 이 당국자는 "북일관계 정상화 워킹그룹 등을 통해 양측 관계도 좋

아질 수 있고, 한일간에도 작년 아베 신조 총리 방한 이후 교류 협력 차원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대화가 잘 이뤄지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며 "외교부 당국자간에 지금 협의가 여러가지 형태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이 되면 개최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밝힘. 그는 또 '북핵 2.13 합의'에서 운영하기로 한 5개 워킹그룹 중 북한과 미국간의 '북미관계 정상화' 워킹그룹 회의가 가장 먼저 3월 초순께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2.13 합의의 후속조치를 성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겠다는 의지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고 「연합뉴스」는 전함(「연합뉴스」 2.23).

북, IAEA 사무총장 초청

2월 24일 「연합뉴스」는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3일 북한으로부터 방북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보도.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이날 "북한이 IAEA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지난 13일 합의한 핵시설 동결과 궁극적인 핵시설 폐기 합의 내용을 이행할 것인지를 알아볼 것"이라고 밝힘.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IAEA 회원국에 복귀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임. 앞서 북한은 지난 2.13 베이징 합의에서 궁극적인 포기를 목적으로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고 IAEA와의 합의에 따라 모든 필요한 감시 및 검증 활동을 수행키 위해 IAEA 요원을 복귀토록 초청하겠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IAEA 대변인은 엘바라데이 총장이 3월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IAEA 이사회가 끝난 후 3월 둘째 주에 방북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엘바라데이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엘바라데이 총장이 북한과 핵시설 동결 및 폐기 문제를 논의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히고 엘바레데이 총장의 방북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앞서 엘바라데이 총장은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 폐기와 동결, 그리고 불능화 조치를 수용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IAEA 사찰 요원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IAEA 사찰단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의 모든 핵 활동이 평화적 목적인지 여부를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 IAEA 고위 관리들은 지난 수개월간 북한 외교관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사찰단의 복귀를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에 따라 북한의 허락만 떨어지면 수일 내로 IAEA 사찰단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IAEA 소식통이 전했다고 「연합뉴스」는 밝힘. 한편 북미 제네바 협정에 따라 IAEA 사찰단은 1994년부터 영변 등지에 체류하며 북한의 핵시설 동결을 감시해왔으나 북한이 2002년 12월 핵시설 재가동을 전격 결정하고 봉인과 감시 카메라를 제거한 데 이어 IAEA 사찰단을 추방했으며 북한이 2003년 1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핵 위기가 심화되었으며 그해 2월 IAEA 특별이사회가 북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결의한 이후 IAEA와 북한 간의 협력 관계가 단절됐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임(「연합뉴스」, 2.24).

BDA 북 계좌 일부 해제 임박

2월 26일 「한국일보」는 북미 금융문제 실무협상 미국측 수석대표인 대니얼 글레이저 부차관보가 26일 방코 델타 아시아(BDA) 문제에 대한 조사결과를 마카오 당국에 통보, 이르면 이번주 중 동결자금 2,400만달러 중 일부가 북한측에 반환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홍콩 주재 미 총영사관 데일 크레이셔 대변인은 이날 "재무부 대표단이 마카오와 홍콩 당국에 조사경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재무부가 BDA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고 「AP통신」이 보도. 마카오의 한 소식통은 "논의가 순조로울 경우 마카오 금융관리국이 이번주중 BDA의 동결 계좌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으며 북한측도 현재 해제되는 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중국 주하이(珠海)의 조광무역 직원들을 마카오에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신문은 전함(「한국일보」, 2.26).